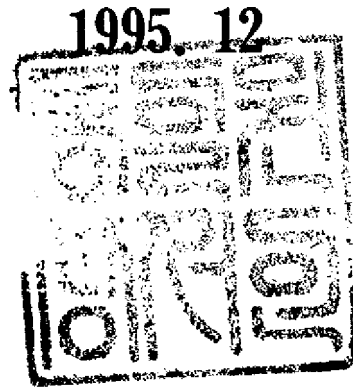


주변국가와 한반도



통 일 원
남북회담사무국

이 책자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및 북·일 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95년에 발표된 논문을 세부 주제별로 발췌·편집한 것입니다.

여기에 수록된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당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목 차

I.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1. 개 요	3
2. 등소평 사후 중국의 체제전망	4
가. 체제전망	4
나. 중국의 정치적 장래 전망	8
3. 중국 정국의 변화 예상 시나리오	11
가. 5가지 시나리오	11
나. 8가지 시나리오	17
다. 6가지 시나리오	20
라. 4가지 시나리오	21
4. 중국의 대외정책	24
가. 대외정책 기조와 방향	24
나. 대동북아 정책 전망	27
5.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30
가. 기본방향	30
나. 강택민의 방한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31
다. 대북한 정책	35
라. 대한민국 정책	40
6. 우리의 대응방향	46
가. 고려사항	46
나. 대응방향 및 전략	48

II. 북·일 관계 개선

1. 개 요	55
2. 북·일 관계개선 전망.....	56
가. 북·일 수교협상 의제분석	56
나. 일본의 한반도 정책	63
다. 북·일 관계개선 전망	64
3. 북·일 관계개선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70
가. 남북한 교차승인 구도의 도래	70
나. 청구권자금의 유입과 북한의 경제난 해소	72
다. 남북경제교류에 미칠 영향	79
4. 우리의 대응방향	82
가. 한국의 고려사항.....	82
나. 북·일 수교의 활용방안	86
다. 역사청산 분제와 한국 관련성	89

I.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1. 개 요

- 본 논문 발췌집은 1995년 1년동안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발표된 논문중 6편을 선정하여 세부 주제별로 주요 내용을 발췌·편집한 것으로 요지는 다음과 같음.
- 덩소평 사후 중국에서는 강택민을 중심으로 한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의한 집단지도체제 유지 전망
 - 당권은 강택민, 행정권은 이붕, 입법권은 전인대 상무위원장 교석 등으로 역할 분담
 - 단기적으로는 개혁과 보수 중심세력의 태도와 군부의 지지 여부, 장기적으로는 경제근대화과 정치개혁의 진행수준과 방향이 강택민 체제의 장래 결정
- 중국의 변화예상 시나리오 중 실현가능성은 「급진개혁형」, 「개발독재형」, 「점진개혁형」, 「반동복고형」, 「천하대란형」의 순서예상
- 중국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념적 색채보다 국가의 실리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 예상
 - 정치·군사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논리 지배
 - 동북아 중시 외교정책 전개
 - 외교정책에서의 군부영향력 점차 감소 등
-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정치적으로는 북한을 우선시하고 경제적으로는 한국을 중시하는 남북한에 대한 정경분리 구사
 -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중국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인식,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도록 북한에 대한 최소한도의 지원 계속 제공
 - 한국으로부터 더욱 많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 적극화
- 우리의 대응방향으로는 분단시대 평화정착을 위한 중국의 기대역할을 북한의 개방유도와 전쟁도발억제에 중점을 두고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중국의 정치변화와 관련없는 대 중국정책기조의 설정 추진이 바람직

2. 덩소평 사후 중국의 체제 전망

가. 체제 전망

- 덩소평 사후 중국에서는 강택민을 중심으로 하는 7인의 정치국 상무위원회에 의한 집단지도체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1976년 모택동 사망이후 화국붕 중심의 집단지도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지 못한 이유는 화국붕이 모택동 사망 5개월전에 후계자로 지목되어 권력기반을 구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고 중국 지도부내에서 문혁파와 반문혁파간의 대립이 심각하게 전개되었기 때문임.
 - 강택민은 1992년 14차 당대회에서 덩소평 후계자로 공식 확정되어 현재 중국 당·정·군의 최고 책임자 위치에 있으며, 당·정·군의 핵심 지도부내에 지지기반을 구축하여 왔음.
 - 강택민은 1989년 당중앙군사위 주석에 임명된 이래 3대 총부(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군부) 및 7대 군구 주요 지휘관을 자파 인사로 교체하고 총 29명의 상장중 25명을 직접 임명하는 한편, 무장경찰부대(국내치안 담당) 사령관에 측근인 파총담을 임명함으로써 군부내 세력기반을 강화하여 왔음.
 - 강택민은 1994년 9월 14기 4중전회에서도 황국 상해시장을 정치국원에 임명하고, 오방국과 강춘운을 중앙 서기처 서기로 등용하는 등 지지세력을 당 핵심부에 포진시켰음.
 - 중국은 1994년 9월 기존 5명의 중앙 서기처 서기를 7명으로 증원함으로써 서기처의 권한을 강화하였는바, 이는 덩소평 사후 집단지도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 아울러 중국 지도부는 덩소평 사후의 권력투쟁은 공산당 지배체제에 심대한 타격을 미쳐 지도부 전체에 공멸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바, 집단지도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강택민 등 중국의 신지도부는 모택동이나 등소평과 같은 정치적 카리스마를 결여하고 있고 혁명과 권력투쟁 등 정치적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관료출신 정치가인바, 등소평 사후 최고 지도자로서의 능력과 재량권에 한계가 있을 것임.
- 따라서 중국 지도부는 당 원로들을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병풍역으로 활용함으로써 통치기반을 강화할 것인바, 만리, 박일파, 양상곤, 송평 등 원로들의 정치적 영향력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등소평 사후에도 중국 당 원로들은 정치국 확대회의의 참여나 일선 정책결정자에 의해 입안된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圈閱制度) 등을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

(신상진, 「등소평 사후 중국의 국내정세 및 한반도 정책전망」)

단기적인 차원에서 강택민 총서기의 장래를 결정하는 국내정치적 요소는 천안문사태에 갈등했던 양 노선 중심세력의 태도와 군부의 지지에 달려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국가적 과제인 경제근대화와 정치개혁을 어느 방향, 어느 수준으로 진행시켜야 하느냐에 달려 있다.

노선투쟁에서 실질적으로 승리했으면서도 등소평의 간여로 실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보수파는 등소평의 영향력이 약화되는 시점에서 강택민 총서기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직접 권력의 전면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비록 권력투쟁에서 천안문사태라는 군중노선을 이용하려다 군의 개입으로 패배했지만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대중적 지지를 확인한 개혁파도 강택민체제 구축과정에서 비적대적 모순세력으로 포용하여야 할 정치세력이다. 모택동과의 적대적 모순관계에서 패배한 등소평이 화려하게 정치의 전면에 재등장한 사례를 보면 조자양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의 재등장이 불가능하다고 아무도 단정적으로 주장하지 못한다. 천안문사태 2주기를 맞아 등소평이 조자양의 재평가 필요성을 제기했고 호계립 전정치국상무위원 등 3명의 조자

양 핵심층근세력이 일제히 행정부차관으로 재기용된 사실은 강택민 총서기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는 개혁파와의 연대라는 절박한 정치적 필요성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등소평과 보수파의 정치생명이 학생시위를 중심으로 한 군중노선에 함몰될 수도 있었던 결정적 위기에서 구출해준 군이 강택민의 충도파를 계속 지지하느냐의 여부가 체제의 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중국군의 전통에서 보면 국가나 공적인 권위에 대한 충성의 유지보다는 개인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인민의 군대'라는 원칙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의 부장력'으로 군이 존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충성심이 당과 군의 보수파로부터 강택민의 충도파로 단기간내에 이전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모택동이 유소기와의 갈등과정에서 1959년에 유소기노선의 팽덕회를 해임하고 임표를 임명하여 군내 정치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군의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내어 문화혁명에 가담시키는데(1966) 거의 6년이 걸렸으며 문화혁명에서 승리하여 유소기를 제거한 후(1968) 군의 영향력을 약화시켜(1971) 당우위의 정치체제로 회복시키는데 거의 3년이 걸렸다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등소평, 양상군에 집중된 군의 충성심을 강택민에게 이전하는데 최소한 5년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등소평의 권위와 군의 협력으로 등장한 강택민체제의 장래는 권력의 등장을 가능하게 한 등소평의 영향력, 보수파와 군의 협력이 지속되는 기간에 달려 있다고 판단된다.

보수파가 권력투쟁과정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등소평과 군에 의지한 대가로 등소평의 뜻을 받아들여 권력의 전면에 직접 등장하지 못하였지만 당과 군내에 기반이 약한 강택민체제에 대해 계속 지지할 것인가는 의문이며 대중의 지지를 확신하고 있는 개혁파의 재기 가능성도 체제안정을 위협하는 변수이다.

당, 군, 정 모두 등소평의 영향력에 의존하고 있는 강택민체제는 등소평의 영향력이 미치는 기간(사망시기를 상정할 수 있음)에 따라 그 운명이 결정

될 것이다. 등소평이 5년이상 강택민의 후견세력으로 견제하다면 강택민은 등소평의 역할을 계승할 것이나 그렇지 못할 경우 단기적으로 보수파가 정치전면에 등장할 수 있다. 보수파가 등소평의 생존기간중 등소평의 권위를 무시하고 조기에 권력장악을 시도할 경우 강택민은 대중적 지지기반이 있는 개혁파와 연대하여 군중노선을 선택하여 보수파의 기도를 저지하려 할 수 있다.

개혁파와 중도파가 연대해서 군중노선을 선택할 경우 1989년의 천안문사태를 능가하는 유혈사태가 예상된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강택민 총서기의 정치적 장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하여는 중국의 국가적 과제인 경제적 근대화와 정치개혁을 지속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 즉 천안문사태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영도급간부들의 친소관계 재형성 추이를 종합해 볼 때 등소평 사후에는 등소평과 같은 황제형 권력보다는 원로의 후견속에 조자양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가 제한적으로 복권되고 당내 보수파의 정치적 위상이 배려되는 집단형 지도체제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등소평 사후 등장할 집단형 지도체제는 등소평 사후 중국이 직면한 '삼권 양방'문제 해결을 분담할 것이다. 여기서 삼권이라 함은 당권, 행정권, 입법권을 말하며, 양방이라 함은 군방과 지방을 말한다. 강택민은 당권을 맡을 것이고, 행정권은 이붕이, 입법권은 전인대 상무위원장 교석이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권은 친등소평계열의 군원로들이 강택민을 지원하는 형태로 관리될 것이며, 당원로들이 지방과 중앙의 갈등을 흡수하여 국가의 통일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국방연구원, 「등소평 사후 중국의 변화전망과 한국안보」)

나. 중국의 정치적 장래전망

중국의 정치적 장래에 대하여 3가지 전개방향을 예정할 수 있는데, 첫번째 방향은 중국이 군과 경찰의 물리력을 이용한 억압체제를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 방향은 동구에서와 같이 가까운 장래에 완전한 민주정부가 수립되는 것이고, 셋째 방향은 민주화를 유보하고 경제성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신권 위주의체제로의 전환이다.

억압적인 현체제의 유지를 골간으로 하는 첫번째 전개방향은 지난 10년간의 개혁을 수포화하고 외교적 고립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홍콩, 대만문제 해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21세기에 강대국으로 부상하려는 국가목표의 달성을 불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적다.

두번째 전개방향 역시 북경대학 여론조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급격한 정치변화를 위해 행동하겠다는 시민의식(civic culture)이 아직 성숙되어 있지 않으며 천안문사태 기간중 대부분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이 적극적으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동구와 같이 노동조합이나 교회를 구심점으로 한 반정부운동이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때문에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세번째 전개방향인 신권위체제는 중국의 국가목표와 내외의 여건을 고려할 때 가장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아시아의 신흥공업국들이 정치적 자유를 일정수준으로 제한하면서 경제건설에 국가정책의 최우선순위를 둔 신권위주의체제를 통하여 국가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국가경영방법과 중국의 최고지도자 덩소평의 정치철학인 '政治反右, 經濟反左'의 원칙과 상통하기 때문이다.

신권위주의체제의 등장과정이 군의 강력한 후원이나 직접개입으로 가능했다는 점과 군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해 있는 중국적 현실과도 유사하다. 강택민이 이끄는 중국의 장기적인 미래는 중국인민의 지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전개방향에 대한 지도부의 선택, 그리고 이러한 선택에 대한 군부의

태도에 의하여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연구원, 「동소평 사후의 중국의 변화전망과 한국안보」)

(1) 권력구조

- 지배체제는 사회주의를 견지하는 한 공산당 1당 통제가 계속될 것임.
 - 시장경제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거대하고 다양한 중국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공산당 1당 체제가 불가피
- 권력형태는 각 집단과 조직의 대표에 의한 과두체제로 유지될 것임.
 - 집단체제는 대내외에 '통일된 안정 중국'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게 됨.
 - 그러나 실제 운영되는 과정에서는 향후 집권체제의 유지와 분권화·다원화의 요구사이에서 내부적 충돌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음.
- 중국은 과거 45년의 공산당 통치하에서 구조적 피로와 구조적 부패가 누적, 통치능력은 이미 상당히 저하되었음.
 -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도자의 신구세대 교체가 얼마나 안정되고 합리적으로 이행될 것인가의 여부가 안정의 관건

(2) 권력승계

- 중국의 최고 권력자는 당분간 강택민이 차지할 것이고, 다음 지도자는 2000년대 이후에나 가시화될 것으로 보임.
 - 단기적으로 강택민의 지위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는 이유
 - 현재의 경제적 문제는 지난 15년간 중국정부가 경험한 경제위기 처리능력을 감안할 때, 국가의 혼란으로 이어지는 사태로 발생하지는 않을 것임.
 - 또한 '92년 이후 중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조정책을 실시하여 다소 개선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음

- 현재 강태민이 행정부와 군부에 구축한 자기 인맥이 적지 않음.
- 5년에 걸친 강태민체제의 권력기반 구축
- 집단지도체제의 권력핵심
 - 강태민(당총서기, 군사위 주석, 국가주석) : 명목상 3권 장악, 외교전담
 - 이봉(국무원 총리) : 실권 없는 국가 주석으로 승진할 가능성 큼.
 - 주용기(수석 부총리) : 개혁개방정책 추진 책임, 총리로 승진할 가능성 있음.
- 차기 지도자 : 공산당 엘리트 간부의 배출 요람인 공청단 출신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음
 - 이서환(현 정치협상회의 주석)
 - 공청단을 거쳐 천진시장을 역임한 실무관료형
 - 세력균형의 역할 담당 능력 보유
 - 천진시장 재직시 탁월한 업적을 쌓는 등 능력을 인정받고 있음.
 - 총서기로 부상한다 해도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역할에 불과
 - 호금도(현 당정치국 상부위원 겸 중앙서기처 서기)
 - 귀주성 및 티벳자치구 당서기, 공청단 서기 역임
 - 사상적으로 개방파에 속하며, 호요방과 송평 등의 발탁으로 중앙에 진출
 - 개인적 능력과 공청단을 배경으로 차기 혹은 차차기의 당총서기감

(3) 권력투쟁

- 등 생존시 지도자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불가능했으나 등 사후에는 현 지도부에 대한 당내 비판이 공공연해지면서 정책의 혼선 예상
 - 등 사후 권력투쟁은 노선투쟁이 아닌 정권의 주도권쟁탈 형식에

국한될 것임.

- 정쟁으로 정책의 일관성 결여, 경제·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 있으나
- 등 사망이라는 국난에 당면하여 안정 단결이 공생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위기감을 초래하는 투쟁으로까지 발전되지는 않을 것임.
- 정책기조는 과거와 같은 고매한 사상이념이나 원대한 목표를 뒤로 한채, 우선 집단체제의 안정과 유지, 눈앞의 실리를 추구하는 실사구시의 정치가 주류를 이룰 것임.

(삼성경제연구소, 「등소평 사후의 중국 정경구도 전망」)

3. 중국 정국의 변화 예상 시나리오

가. 5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 현재와 같은 집단지도체제

- 등소평 생전에 형성된 기존 집단지도체제가 당분간 큰 변화 없이 지속됨.
- 상황근거
 - 등소평 자신이 사망 이후 야기될 혼란을 극소화하기 위해 강택민, 이봉, 주용기를 축으로 하는 현 집단체제 구축
 - 국가와 당이 한 두사람의 위신에 기초해서는 문제('93. 11)
 - 강택민을 중심으로 단결('89년 이후 누차)
 -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위원 대부분이 개혁파임.
 - 지도층 모두 현시점에서 안정 단결이 공생의 길임을 인식

- 보수파도 개혁의 속도에만 이견을 보일 뿐 그 원칙과 방향에는 동조
- 江-李-朱 어느 누구도 압도적인 지지 기반과 카리스마를 구축하지 못했음.
- 전망
 - 강택민의 입지가 견고한 것은 아니나, '97년 전인대까지는 강을 중심으로 한 현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임.
 - 등의 '강 중심 단결' 반복 주장은 강이 아직 권력의 핵심이 되지 못했음을 반영
 - 집단지도체제의 안정은 각계각층의 화합, 단결,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유사 이래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고, 동시에 반대파와의 정쟁으로 정책일관성 결여, 경제혼란, 사회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신중국에서 처음으로 절대적인 구심력과 걸출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개혁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단결을 고수하기가 그리 용이하지는 않을 것임.
 - 지금까지는 강택민의 안정성은 등소평의 후견으로 지탱해 왔던 관계로 동 사후 그 위치는 불투명

<시나리오 2> : 개혁파의 장악

- 과도적인 집단체제후 급진적 개혁파가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
- 상황근거
 -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경제가 정치를 선도하는 형태로 전환
 - 경기 동향에 따라 개혁·보수파의 입지가 반복적으로 전환
 - 최근 경제발전 추세가 계속되면서 긴축보다는 개혁·개방을 통한 발전의 가속화 요구가 드세짐(필요성이 더욱 고조).
 -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장화 제도

국한될 것임.

- 정쟁으로 정책의 일관성 결여, 경제·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가능성 있으나
- 등 사망이라는 국난에 당면하여 안정 단결이 공생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위기감을 초래하는 투쟁으로까지 발전되지는 않을 것임.
- o 정책기조는 과거와 같은 고매한 사상이념이나 원대한 목표를 뒤로한채, 우선 집단체제의 안정과 유지, 눈앞의 실리를 추구하는 실사구시의 정치가 주류를 이룰 것임.

(삼성경제연구소, 「등소평 사후의 중국 정경구도 전망」)

3. 중국 정국의 변화 예상 시나리오

가. 5가지 시나리오

<시나리오 1> : 현재와 같은 집단지도체제

- o 등소평 생전에 형성된 기존 집단지도체제가 당분간 큰 변화 없이 지속됨.
- o 상황근거
 - 등소평 자신이 사망 이후 야기될 혼란을 극소화하기 위해 강택민, 이붕, 주용기를 축으로 하는 현 집단체제 구축
 - 국가와 당이 한 두사람의 위신에 기초해서는 문제('93. 11)
 - 강택민을 중심으로 단결('89년 이후 누차)
 -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위원 대부분이 개혁파임.
 - 지도층 모두 현시점에서 안정 단결이 공생의 길임을 인식

- 보수파도 개혁의 속도에만 이견을 보일 뿐 그 원칙과 방향에는 동조
- 江-李-朱 어느 누구도 압도적인 지지 기반과 카리스마를 구축하지 못했음.
- 전망
 - 강택민의 입지가 견고한 것은 아니나, '97년 전인대까지는 강을 중심으로 한 현 체제가 유지될 수 있을 것임.
 - 등의 '강 중심 단결' 반복 주장은 강이 아직 권력의 핵심이 되지 못했음을 반영
 - 집단지도체제의 안정은 각계각층의 화합, 단결, 협조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유사 이래 처음 시도되는 제도이고, 동시에 반대파와의 정쟁으로 정책일관성 결여, 경제혼란, 사회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음.
 - 신중국에서 처음으로 절대적인 구심력과 걸출한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 개혁이 가져올 경제·사회적 변화에 대응하면서 단결을 고수하기가 그리 용이하지는 않을 것임.
 - 지금까지는 강택민의 안정성은 등소평의 후견으로 지탱해 왔던 관계로 등 사후 그 위치는 불투명

<시나리오 2> : 개혁파의 장악

- 과도적인 집단체제후 급진적 개혁파가 권력을 장악하는 경우
- 상황근거
 - 개혁·개방이후 중국은 경제가 성장을 선도하는 형태로 전환
 - 경기 동향에 따라 개혁·보수파의 입지가 반복적으로 전환
 - 최근 경제발전 추세가 계속되면서 긴축보다는 개혁·개방을 통한 발전의 가속화 요구가 드세짐(필요성이 더욱 고조).
 - 세계 경제의 일원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장화 제도

의 정비, 개선이 불가피

- 경제적 혜택을 입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한 국민과 지방의 개혁 요구 심화

○ 전망

- 강택민이 보수지향적 개혁정책을 의도적으로 추진할 경우 범 급진개혁세력이 결속되어 새로운 리더를 추대할 가능성 내포
- 그러나 그 조건은 현재 내포된 각종의 경제·사회적 문제가 해소 내지는 뚜렷한 완화 조짐을 보여야 한다는 것임.
- 또한 예상되는 지속적인 소유제, 개혁 등에 대한 보수파의 반격을 억제할 만한 지도노선의 개발이 선결되어야 함.
- 한편 개혁의 심화는 중앙정부의 권위저하, 이기주의 심화를 야기, 통제불능의 상황국면으로 발전되면서
 - 민주화에 대한 요구도 거세어질 것이고,
 - 따라서 공산당 일당 체제가 다당 체제로 발전할 수도 있음.

<시나리오 3> : 보수파의 장악

- 개혁·개방의 점진적 추진을 주장하는 보수파의 권력장악

○ 전망

- 개혁파가 최근 심화되는 각종 경제·사회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 개혁·개방에 동참하지 않는 구공산당 가득권 세력의 조직적인 반발
- 국유기업 개혁의 심화로 발생한 실업인구의 반개혁화 운동
- 보수 군부의 불만
- 국민의 민주화 요구 증폭으로 공산당 지도체제가 위협당할 경우

○ 전망

- 보수파의 장악 가능성은 반반임.

- 장악한다 해도 그 구체적 윤곽은 '97년 이후에나 나타날 것임.
- 보수파의 장악은 경제개혁·개방의 속도를 완화하면서 아주 점진적으로 접근할 것이나,
 - 지방의 개혁요구, 국민의 개혁 열가와 시장경제로 진입한 경제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메카니즘 노하우 결여 등으로 오히려 경제혼란만 가중시키면서 단명으로 끝날 가능성 많음.
- 리더는 이봉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막후 실력자가 나타날 수도 있음.

<시나리오 4> : 공산당의 분열

- 공산당 1당 지배체제가 와해되면서 민주적 다당제의 체제 출현
 - 상황근거
 - 절대적 우세자가 나타나지 않는 상황에서 계파간 정책노선 갈등에 의한 공산당의 분열
 - 보수파의 경제적 실패에 따른 사회불만 고조
 - 경제발전애 따른 시민의식 고취로 정치 민주화 요구 격화
 - 지식인, 사영기업, 경영엘리트, 중산층의 규합으로 구조적으로 부패하고, 통치능력을 상실한 공산당에 대항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부상
 - 기존 소수 민주당파의 실세화
 - 전망
 - 이 시나리오는 2000년 이후에나 출현가능성 있음.
 - 지도자가 어떤 특성을 갖느냐에 따라 전개되는 구도가 달라질 것이나
 - 국가나 지방이 분열되는 상황은 아님.
- ① 가능성 1(민족주의적·독재적 지도자가 부상하는 경우)

- 정부비관에 대한 철저한 탄압
- 홍콩·대만에 대한 강압정치
- 경제발전과 군비증강에 주력
- 반미·반일 노선 채택으로 아시아의 패권화 유도
 - 강력한 중국, 아시아 정세의 불안정 요인으로 대두

② 가능성 2(민주적 지도자가 부상하는 경우)

- 강력한 중화경제권의 실현을 목표로 경제발전이 주력
- 정치적으로 점진적 민주화 추진
- 대 서방과의 관계개선 강화를 통한 확실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잔존
 - 아시아 역내에서의 공존 공영 모색
 - 강력한 중국, 아시아 정세의 안정요인으로 대두

<시나리오 5> : 지방분열·천하대란

- 권력 엘리트간, 계층간, 군부간의 대립이 극단화되어 치열한 권력 투쟁이 전개되면서 지역별 갈등으로 비화, 천하대란이 일어나면서 국가가 연방화내지는 분열되는 경우
- 근거
 - 등과 같은 절대적 막후 조정자 미출현
 - 중앙내의 권력투쟁으로 경제가 침체되면서 중앙의 재정고갈, 통제력 약화
 - 지방통제 불능, 국가 위기관리 능력 상실
 - 군사비 감축, 군부통제력 약화, 원거리 병력투입 능력 감소
 - 정치·사회적 혼란 가속화로 지역 이기주의 심화, 지방의 반란으로 발전
 - 사회혼란은 비밀결사, 갱단 창궐, 노동자봉기 등으로 확대되면서 지역별 통제세력이 대두

○ 전망·평가

－ 동시나리오는 가능성은 희박하나 발생하면 매우 장기적으로 2010년 이후에나 발생할 수 있음.

· 상황에 따라 다음 두가지 가능성을 내포

① 가능성 I : 국가가 분열은 안되나 경제와 정치가 극도의 혼란상태

－ 정치의 불안정, 혼란으로 권력투쟁 심화

－ 경제정책의 소실,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으로 국력 퇴보

－ 국가의 불안정이 주변국의 정세 안정에 불리

② 가능성 II : 국가의 분열 내지는 연방국가화

－ 국도의 혼란을 거쳐 지방이 중앙으로부터 독립되어 연방제 혹은 몇개의 국가로 분할되면서 중국의 국세가 크게 취약해지는 시나리오

－ 미국, 일본 등의 입장에서는 내심 바라고 있는 시나리오

－ 거대한 공룡을 옆에 둔 우리나라로서도 이 시나리오가 부정적이지는 않음.

－ 연방제로 될 경우 전국이 8~10개로 구분될 것임(군구를 중심으로)

(삼성경제연구소, 「등소평 사후의 중국정경구도 전망」)

<시나리오 I> : 점진개혁형(보혁균형의 현상유지 지향)

－ 『경제개혁·정치보수』를 내세우며 기존의 등소평노선을 유지하는 구조임. 이런 체제는 등사후에도 적어도 차기 전당대회가 열리는 1997년까지 계속될 것임.

<시나리오 II> 급진개혁형(개혁의 확대 가속화)

－ 『동구형 개혁체제』로 복수정당체제, 자유화가 확대되는 구조임.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사태는 보수반동세력의 도전, 지방세력의 할거, 군벌의 난립투쟁, 소수민족들의 독립선언 등임.

<시나리오 III> 반동복고형(교조주의적 과거체제의 확대지향)

- 모택동체제로의 완전복귀보다는 변화와 개혁을 극소화하면서 상실한 보수파의 기득권을 회복하려는 구조임.

<시나리오 IV> 붕괴대란형(지방주의·할거주의 만연)

- 최악의 시나리오로 그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지만 사안이 심각하기 때문에 등소평 자신도 평소 이를 우려해 왔음.

<시나리오 V> 개발독재형(경제우선의 대국주의 노선)

- o 이상 5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실현가능성은 『급진개혁형』, 『개발독재형』, 『점진개혁형』, 『반동복고형』, 『천하대란형』의 순서임.

(구종서, 「등소평 사후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와 한반도」)

나. 8가지 시나리오

중국은 등소평의 사망이후에도 강택민 총서기를 중심으로 정국안정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홍콩의 월간지 '90년대' 3월호가 전망했다. 이 잡지는 '대륙사회 모순과 등이후 정국 예측'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등 사후의 중국정국에 관한 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다.

① 강택민 중심의 안정·성장

중국이 강택민체제를 중심으로 경제 성장 및 개혁심화를 추구, 장기적으로 정국 안정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르면 강택민은 등소평의 개혁 개

방 노선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한편, 산업구조 조정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를 통해 권력의 합법성을 제고하게 된다. 강택민이 권력의 안정을 위해 좌우양파의 균형을 도모하는 한편, 지방 정부 및 군부도 효과적으로 통제, 확고한 사회안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하여서는 등소평의 생존시 강택민이 군대 및 지방에 대한 조정능력을 강화해야 하며, 체제 외부의 민주화 세력과 힘을 합쳐 체제내 반대파들을 통제해야 하고, 농업발전, 농촌의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② 민주세력과 충돌후 수습

강택민 중심의 주류파가 당권을 공고히 장악한 가운데 사회모순이 다소 심각해지고 민주화 세력과의 충돌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소혼란에 대하여 강택민체제는 당의 내부 단결과 사회안정을 통해 곧 민심을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③ 당내·지방과 수시로 충돌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민생은 안정되나, 강택민의 조정 능력 부족으로 당내 좌우 계파 및 중앙과 지방정부간에 충돌이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이는 등소평의 생존시 강택민을 비롯한 주류파와 다른 계파간의 단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과도기적 현상으로 역시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④ 모순악화 중앙권위 도전

강택민의 권력 및 체제의 단결은 비교적 확고하나, 사회정치적 모순의 악화로 중앙의 권위가 도전을 받게 되는 경우이다. 강택민체제는 이를 해결할 능력이 있으나, 정책상의 미스로 경제가 악화되면 민간 소요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중국공산당의 권위와 조정 능력은 다소 타격을 받을 수 있다.

⑤ 국민들 봉기속 보혁다툼

경제침체로 인해 일반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민주화 세력의 봉기가 일어나는 이른바 ‘충돌 또는 대치 모델’이다. 경제난은 실업 증가와 물가 상승, 통화팽창 및 농업의 위축을 가져오고,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사회소요와 민주화 운동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당내부에선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주도권 쟁탈전이 가열, 개혁파가 민주화 세력과 타협하거나 보수파가 강압적인 수단으로 민간 소요를 진압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군부의 태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⑥ 민심 더욱 악화 무혈혁명

지방 제후들의 준동과 부정부패의 악화 등으로 민심이 더욱 악화, 강택민 체제의 단결력이 크게 저하되고 민주화 운동이 가열되는 이른바 ‘무혈혁명모델’이다. 이 경우, 당내 개혁파들은 민주화 세력들과 제휴, 보수파를 타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에 따라 중국이 민주화의 길로 나갈 가능성이 높다.

⑦ 체제불안 지속...혁명국면

체제불안이 장기화되어 무혈 또는 유혈혁명이 모두 가능한 본격적인 혁명국면이다. 이때에는 당내 개혁파와 민주화 세력의 역량이 얼마나 조직화되어 있는지 여부가 이들의 정권 장악에 관건이 될 전망이다.

⑧ 지방세력들의 독립 시도

국가와 사회가 허약해진 가운데 지방 제후들이 독립을 시도하는 최악의 국면이다.

(국방연구원, 「등소평 사후 중국의 변화전망과 한국안보」)

다. 6가지 시나리오

천안문사태 5주년을 맞아 대만에서 발행된 ‘등소평 후의 중국’이라는 제목으로 두 권의 책이 출판되었다. 한 권은 조자양 전총서기의 측근이었던 오국광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왕조군과 공저하였으며, 또 다른 한 권은 ‘中時週刊’ 편집장 하빈이 편집하였다.

이 두 권의 책에서는 등소평 사후 중국의 변화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음.

- ① 이붕총리 중심 좌익독재
- ② 우익 또는 군부 철권통치
- ③ 강택민체제로 현상유지
- ④ 급속한 민주화 정치변혁
- ⑤ 통일성 유지 점진 민주화
- ⑥ 잠재갈등 분출 천하대란

저자들은 좌익독재를 끌고 간 선두주자로 이붕 현총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들이 보기에 이붕 배후에는 권료와 당직자, 고급간부의 자제들이 비티고 있다. 또한 진운 같은 원료와 동력군 등 당내 교조적 이론가들이 그의 우군이다. 만일 시장경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이붕의 지지세력들이 권력을 쥐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이들은 분석한다.

이와 반대로 우익 또는 군부독제가 출현할 경우다. 미국 프린스턴대학 교환교수로 있는 진규덕은 중국이 사회주의를 폐기하는 것이 최선이지만 등소평 사후에야 이 임무를 떠맡을 사람이 나올 것으로 믿고 있다. 진규덕은 좌익독제보다 더 가혹한 우익독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예측한다.

한편, 호남사범대 교수 안진은 등소평 사후 주육이 현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봄. 강택민 총서기의 권력기반이 안정단계에 올랐으며 잠재적인 권력위협요소는 우려할 정도가 아니라는 분석이다.

천안문시위에 동참했던 주타는 급격한 민주화를 유력한 시나리오로 보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민주화는 폭정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시나리오의 결과에 대해선 비관적이다. 그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정치변혁 자체가 아니라 '변혁의 속도가 통제 불가능 정도로 빨리 진행되는 것'이라고 진단한다.

미국 예일대학의 왕소광 같은 인물은 상당히 낙관적이다. 그는 중국이 국가적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서서히 민주화를 달성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한다. '모든 일에 대약진이란 있을 수 없으며 민주화도 마찬가지'라는 게 그의 논지이다.

마지막으로 천하대란설이다. 이 가설의 근거는 덩소평이 정치개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덩소평의 후계자는 권력의 합법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논리이다. 지방의 반발, 경제적 불평등, 민족모순, 홍콩·대만문제, 인접국과의 국경충돌, 지배층의 실정 등이 대혼란을 초래하는 주원인으로 꼽힌다.

(국방연구원, 「덩소평 사후 중국의 변화 전망과 한국안보」)

라. 4가지 시나리오

국내에서는 한양대 중소문제연구소가 덩소평 사망후의 중국사회에 대한 전망에 관한 홍콩시사주간지의 보도내용을 종합하여 4가지 시나리오를 소개, 제시하고 있다.

- ① 보수파의 집권
- ② 현재의 강택민체제 유지
- ③ 공산당의 해체
- ④ 온건민주파의 집권

첫번째 시나리오는 진운 등 당원로를 중심으로 온건개혁 내지 보수세력이 집권하면서 개혁·개방의 속도를 제한한다는 것이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덩소평노선이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가정이다. 셋째 시나리오

는 급진민주파가 집권하여 당 건설의 금지, 언론의 제한을 철폐하고 즉각적으로 서방식의 의회제를 실현하게 공산당이 해체되는 변화양상이다. 넷째 시나리오는 온건 민주파가 집권하여 효과적으로 사회의 기본질서와 정치안정을 보장할 뿐 아니라, 우선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전제하에서 점진적으로 민주변혁을 실시하는 시나리오이다. 이 밖에도 유고식의 내전, 매우 느슨한 연방제, 미국식 연방제, 중앙과 지방의 전면적 분열 등의 시나리오를 소개하고 있다.

위의 시나리오를 소개한 연구자는 4개의 시나리오를 실현가능성 차원에서 구별하고 있는 비교적 적실성이 있는 것으로 ②와 ④의 시나리오로 설명하고 있다. ①의 시나리오와 같이 보수파와 태자당 중심의 집권은 89년 천안문 사건에 태동된 잠복된 지식인 사회의 이반을 막을 수 없고 개혁개방이 상당 정도 진척된 상태에서 정치적 기반이 약하다. 물론 권력교체기에 당원로 중심의 일시적인 집권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지속적인 권력유지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③의 시나리오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가 중국사회에 주는 충격이 좌편향 만큼이나 클 것이고, 더구나 중국의 시민사회가 성숙되지 않고 중화적 질서와 사회주의 정치사회화를 오랫동안 경험해 왔던 의식변화를 주동적으로 추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서 현실에서의 한계를 지닐 수 있다. 따라서 ②와 ④의 시나리오를 보다 현실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것이다.

②의 시나리오는 대체적으로 중국사회에 여전히 지배적인 힘을 보유하고 있는 공산당에 기반하여 정치적 민주화에 일정한 제한을 기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매우 유연한 전략을 사용하는 이른바 '신권위주의'의 내용적 차용을 예상할 수 있다. 중국이 처한 현실에서 급격한 정치적 민주화보다는 정치안정에 기반한 경제활성화를 통한 가시적인 체제만족 효과를 제고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것은 대중일반의 정치적 수동성과 함께 일정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가 '등소평 없는 등소평노선'을 장기적으로 관철하면서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을 가질 수 있다. ④의 시나리오는 현재의 사회주의와 현대자본주의 제

인식, 혼란에 대한 중국인의 전통적인 공포, 그리고 점증해 가는 민주화 요구를 총체적으로 결합한 분석틀이긴 하지만, 현실의 정치권력관계에서 여하히 기존의 지배블록을 대체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없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로 남아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동 분석은 등소평 사후 권력질서는 다음 네 가지 성격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첫째, 강택민을 중심으로 권력이 공고화될 것이다. 강택민은 상해시장을 역임하여 현재의 지방의 경제문제를 잘 이해하고 있고, 현재의 권력구조에서 대체적으로 덕재겸비한 다소 조정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당-정-군을 장악하여 리더십의 실험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권력교체기의 다른 대안이 없다는 점도 그의 입지를 상대적으로 강화해 줄 것이다.

둘째, 강택민-주용기-교석으로 이어지는 일정한 권력균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안은 강택민이 군경협이 없어 완전하게 군을 장악할 수 없다는 점, 권력형성이 수동적이어서 이붕 등에 비해 구체적인 자기계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 등은 한계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강택민이 정무, 외교 전반을 장악하고 주용기가 경제문제를 처리하며 중국정치권내에 가장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고 정치적 조정력이 뛰어난 교석을 통해 각종 파워게임과 갈등을 조정하면서 정국안정을 유지하는 안을 제시하는 견해이다.

셋째, 강택민-주용기라인의 기본축과 교석-전기운 라인이 보조축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것은 두번째의 특징과 유사하지만 대체적으로 강택민과 주용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이를 보조해 주는 기능으로서 교석-전기운 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넷째, 강택민-주용기-이붕의 현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현재의 지도체제는 14전인대회와 8기 전인대의 기본축을 형성해 왔고, 일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동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고 있다. 이붕은 전문적인 행정가로서 중앙의 중견간부 그룹에서 이붕노선이 상당하다는 현실

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붕의 퇴진은 천안문 사건 당시 중국지도부의 실책을 그대로 시인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정치적인 문제가 깔려 있다. 따라서 이붕노선은 그 지위와 역할상에서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권력으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붕의 정치적인 명예퇴진과 현실적인 강-주체제의 부상을 예상할 수도 있다.

(국방연구원, 「등소평 사후 중국의 변화전망과 한국안보」)

4. 중국의 대외정책

가. 대외정책 기초와 방향

- 등소평 사후에도 중국은 대내 경제건설에 유리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 경제력과 군사력 증강을 통해 아시아에서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을 유지·확대하는데 대외정책 목표를 둘 것이며, 미·일 등 서방국가와의 경제협력정책과 주변국에 대한 선린외교를 지속할 것임.
- 등소평 사후 중국지도부는 개혁·개방정책을 통한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이 국민의 지지를 유도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판단할 것인바, 중국의 대외정책 노선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는 보이지 않음.
- 그러나 등소평 사후 권력승계의 과도기에 군부 등 보수파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의 대외정책자세가 다소 경직될 가능성도 있음.
- 과거 중국은 정치적 변혁기에 대외 타협정책보다는 대외 강경정책을 채택하는 경우가 많았음.
- 1987년 호요방과 1989년 조자양이 숙청된 이유중의 하나는 이들이

인권과 민주개혁 요구에 동정적 태도를 보이고 대외 타협노선을 추종하였던 데 있었는바, 등소평 사후의 지도부가 강경파에 의해 숙청당할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대외 강경외교 자세를 견지할 가능성이 있음.

- 한편, 등소평 사후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대외정책은 기본적으로 이념적 색채 보다 국가의 실리를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임.
- 또한 중국은 중화민족주의 기치하에 홍콩과 대만의 주권회복과 남사군도의 영유권문제 및 인권 등 내부분쟁에 대해 강경자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음.

(신상진, 「등소평 사후 중국의 국내정세 및 한반도 정책 전망」)

등소평 사후에 강택민을 중심으로 현재의 영도급간부들이 집단지도부를 구성할 경우 중국의 외교정책은 등소평시대에 전지되어온 이러한 신국제질서 수립을 위한 외교방침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다음 몇가지 사항이 발전적으로 수용될 것이다.

첫째, 정치·군사적 고려보다는 경제적 논리가 외교정책에 더욱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신국제질서 확립 외교지침은 상대적으로 국제적 위상과 총합국력이 약한 가운데 고려한 군사적 요소와 이데올로기적 요소가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1970년 후반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 ‘생산력의 획기적 증대를 통한 부국건설’을 위해서는 경제분야의 국제협력을 보다 중시하는 외교를 지향할 것이다.

둘째, 지역적으로 동북아를 보다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냉전시대 군사안보적 고려때문에 구소련·미국을 중심으로 한 외교가 중요시되었으나 향후에는 동북아시아를 보다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정치경제적 패권추구를 견제하고 인접국가를 친중국화하는 적극적 외교정책을 지향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외교정책 방향에서 군부의 영향력이 점차 감소할 것이다. 중국 정치

의 구조적 특징상 군의 국내정치적 영향력이 상당부분 유지될 것이나 외교 정책에 영향을 행사할 기회는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개혁개방으로 인하여 개혁개방의 수혜세력, 대외관계 전문가의 국내정치기반이 강화될 가능성이 많은 반면에 군의 정치영향력은 국내정치에 국한되어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전망은 등소평 사후에 강택민을 핵심으로 한 현재의 지도체제가 영도급 간부지위를 유지할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다. 그렇지 못하고 개혁개방을 우려하는 정치집단과 군내보수파가 결합하여 권력을 장악할 경우 대외정책은 등소평시대 이전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하지는 못한다. 1993. 4 중국 중앙군사위와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후군부의 우영파 등을 중심으로 160명의 장군들은 등소평의 대미정책이 ‘관용, 양보, 타협’으로 되어 있다고 비판한 적이 있다. 이들은 ‘우리의 의견과 입장’이라는 의견을 통하여 “중미수교후 미국은 중국에 대한 내정간섭과 전복활동을 정지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소련 해체후 중국을 전략적인 적으로 간주하여 공개적인 전복을 피력하면서 중국정부와 중국인민에게 도전해 왔다. 미국은 선의를 저버리고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대만독립을 부추기며 티벳과 달라이 라마의 분열주의를 지지하고 있으며, 최혜국 대우라는 상호우대정책을 이용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군부의 이러한 태도는 미국의 인권외교에 불만이 있는 등소평을 비롯한 영도급 간부와 국민의 일반정서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정치에 파문을 일으키지 않았다. 우영파 등 군간부와 등소평의 관계를 고려할 때 등소평의 양해를 받았을 가능성도 크다. 그러나 군부의 이러한 행위는 군부가 외교전문관료들과 다른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사례로 이해된다. 등소평 사후 군을 중심으로 한 보수파가 정권을 장악하였을 경우 대외정책은 다음 몇 가지 방향으로 수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평화적 방법에 의한 사회주의체제 전복을 우려하는 안보적 예방외교적 목적에서 정경분리의 국제협력노력이 모색될 것이다. 안보적으로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의 국제교류는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이다. 체제를 달리하는 주변국가와의 관계도 일정부분 긴장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둘째, 미국을 경계하고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강대국 외교를 더욱 중요시 할 것이다. 중국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와 관계를 중시하는 동시에 전통적인 제3세계와의 정치적 제휴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중시할 것이다.

셋째, 군부의 태도가 외교정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개혁개방속에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약화된 군부가 집단이익을 고려하여 국제정치에 군사적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유형의 대외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할 경우 중국 군사력에 대한 주변국의 경계가 고조될 것이고, 이 영향으로 중국의 대외협력노력은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다.

(국방연구원, 「등소평 사후 중국의 변화전망과 한국안보」)

나. 대동북아 정책 전망

중국의 대동북아정책은 대외정책의 기초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서 지역의 특수한 환경에 적용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개혁개방정책을 본격화한 이후 중국의 대동북아정책은 '개혁·개방정책에 유리한 주변환경 조성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질서가 자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실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구축되도록 하기 위해 역내국가들과의 우호협력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역내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은 92년 4월 북경에서 개최된 제48차 아태경제사회위원회(ESCAP) 총회에서 외교부 부부장 유화추가 밝힌 '아태지구 협력강화를 위한 5개원칙'에 잘 나타나 있다. 그가 말한 5개원칙은 ① 상호존중, ② 평등호혜, ③ 상호개방, ④ 공동번영, ⑤ 상호협상 등이다.

현재의 영도급 간부를 중심으로 순조로운 권력계승이 이루어질 경우 신체

제하에도 이와같은 정책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다음 몇 가지 사항에 중점이 주어질 것이다.

첫째,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동북아 지역국가와의 경제협력 구축을 강화할 것이다. 이미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한국 등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강화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경제협력체 구성에도 적극적일 것이다. 유럽 및 북미지역에서 지역경제블럭이 형성되는 등 세계경제의 블럭화 추세에 직면하여 중국은 자국이 중심이 되는 동북아 경제권 형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관련, 중국은 황해유역 및 두만강 일대를 중점 경제개발지구로 확정하고 있다. 한국과의 수교를 결정하게 된 이유중의 하나도 중·일·남북한을 포함하는 동북아경제권을 형성하고자 하는 중국의 동북아정책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안보전략적 차원에서는 러시아의 퇴조와 미국의 정책변화로 형성될 힘의 재배열과정에서 일본의 영향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견제하고 있다. 현재 동북아 지역은 미일상호방위조약(1960. 6), 한미상호원조조약(1954. 11), 북중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61. 7), 북소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61. 7) 등 쌍부동맹조약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 그러나 한소수교, 한중수교 등 역내국가의 기존관계가 본질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미국 또한 국내정치경제적 이유로 인하여 대동북아 군사전략을 변화시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이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역내에서 정치군사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중국의 대동북아 전략을 손상시킬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중심의 단극적 세계질서 형성을 억제하는 인자로서 일본을 활용해야 하는 동시에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를 견제하여야 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주변국가에 대하여서는 신장된 국력과 현대화된 군사력을 통하여 친중국적인 정책을 강요하는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평화5원칙을 강조하면서도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정책을 우호적으로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현실주의적

외교정책을 전개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남사군도 등 영토문제와 관련하여 강경한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만약 현재의 개혁·개방 방향에 불만을 가진 세력이 군내보수파의 지지를 통해 집권한다면 다음 몇 가지에 중점을 두고 동북아 정책을 전개할 것이다. 첫째, 경제보다는 안보에 정책중점을 둘 것이다. 남사군도 문제 등 주변국가와의 분쟁해결 방법에 대하여 정치군사적 위협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볼 때 중국 민족주의(중화사상)가 대동북아 정책에 주요한 요인으로 연계, 반영될 것이다. 둘째, 미국·일본과의 마찰은 심화되는 대신에 러시아와의 협력이 강력하게 모색될 것이다. 중국을 평화적으로 전복하는 진원지로 미국·일본을 지목할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러시아와의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셋째, 대만통일문제가 동북아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현재의 지도층은 통일의 원칙을 견지하되, 급격한 통일을 추구하여 지역불안정을 야기하고, 서방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대만의 분리독립을 억제하는 소극적 통일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즉 평화에 비중을 둔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강경보수파는 '평화'보다는 '자주'에 중점을 두고 통일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결론적으로 강경보수파의 집권경우를 제외하고 등소평 이후체제의 동북아 정책은 현재의 동북아정책을 승계할 것으로 대체적으로 전망된다.

(국방연구원, 「등소평 사후 중국의 변화전망과 한국안보」)

5.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가. 기본방향

- 등소평 사후 중국은 대내외 안정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할 것인 바, 중국은 당분간 현재와 같이 정치적으로 북한을 우선시하고 경제적으로는 한국을 중시하는 남북한에 대한 정경분리 정책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하고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할 것임.
- 1992년이래 강택민 등 정치국 상무위원들이 한반도정책을 결정하여 왔는바, 등소평 사후 강택민 중심의 집단지도체제하에서 중국의 한반도정책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신상진, 「등소평사후 중국의 국내정세 및 한반도 정책 전망」)

중국의 이붕총리는 94년 3월 전인대회 정부활동보고를 통하여 “중국은 주변각국과의 우호관계를 증진시켰으며, 중·북한 우호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되었다. 동시에 중국은 일본, 러시아, 한국과 상호협력관계를 부단히 확보하였다.……”라고 하였다. 이붕총리가 중·북한 우호관계를 우선 강조하고 한국과의 협력증진을 일본, 러시아 다음에 언급한 것은 현재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만약에 현재의 강택민-이붕체제가 순조롭게 권력을 계승한다면 이러한 정책방향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분석된다.

강-이체제가 등장한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80년초 이후부터 추진되어온 정경분리의 등거리 외교정책이 유엔동시가입(1991), 한중수교(1992), 북한핵문제 등에 대한 입장을 통하여 등거리 정책을 보다 공식화한데 있다고 분석된다.

중국이 등거리정책을 추진하는 기본배경은 자국의 국가전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안정이 동북아정책 및 세계정책 그리고 국가발전전략에 일치하기 때문이다. 즉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유지를 바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현재의 남북관계가 평화적으로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다. 현상변화가 시도되는 과정, 특히 무력으로 시도되는 과정에 야기될 불안정과 혼란은 중국의 중요한 국가이익을 손상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이다.

(국방연구원, 「등소평 사후 중국의 변화전망과 한국안보」)

나. 강택민의 방한과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1995년 11월 14일 중공중앙총서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겸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주석 즉 중국의 당·군·정의 삼권을 대표하는 강택민은 대한민국 국회에서 전국에 생방송되는 연설을 하였다. 그의 연설은 중국과 한국의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중양국 인민의 우호왕래는 ‘유구한 역사’를 지닌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앞으로의 발전도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중국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위대한 성공’을 사회주의경제의 개혁과 개방에 의한 안정적 발전과 ‘중국공산당 영도하의 다당 협조와 정치협상제도’라는 정치의 안정으로 한국국민들에게 설명하였다.

셋째, ‘중국위협론’은 무의미한 것임을 중국의 낙후된 발전상태와 국민총생산 1.5%의 방어적 군사비, 군수공장의 76%의 민수전환 그리고 100만 감군을 예로 들어 설명하였다. 특히 “중국은 영원히 군비경쟁에 참가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확장을 하지 않을 것이며 영원히 패권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의 발전이 세계평화에 유리하고 중국의 강대가 평화역량의 성장으로 된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한중관계에서도 그러한 원칙이 적용됨을 천명하였다.

넷째, 중국의 대외정책은 평화공존 5원칙에 근거하여 패권주의, 강권정치를 단호히 반대하고, 세계각국과 우호적으로 지낼 것을 원하며 특히 이웃나라들과 선린우호관계의 발전을 중요시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과의 관계도 그러한 맥락에서 설명하고 있다.

다섯째, 아·태지역문제에 대하여서는 지역의 안정과 번창을 희망하고 중국은 평화를 사랑하고 남의 나라 주권을 존중하며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 어떠한 사리도 추구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여섯째,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기본 준칙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의 수호를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한반도와 가까운 이웃'으로 중국의 입장은 "반도 남북쌍방이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신뢰를 점차적으로 증진하고 관계를 개선하며 나중에는 민족의 화해와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할 것을 전심으로 희망한다"라고 하였다.

일곱째, 그는 한·중앙국은 지리적 우세와 유사한 문화전통, 그리고 침략당한 역사적 운명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수교 후 3년 동안 정치·경제·과학·기술·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우호협력관계가 빨리 발전하고 뚜렷한 성과가 있었다고 보았다.

여덟째, 앞으로 양국은 '평등호리·우세호보·성심합작·공동발전'이라는 원칙에 따라 경제무역협력을 강화하고, 평화공존 5원칙에 기초하여 서로 진심으로 대하면 반드시 선린우호와 호혜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德不孤, 必有隣'(덕이 있는 자는 반드시 동반자가 온다)라는 말을 미래 관계발전의 덕목으로 인용하였다.

국회연설 외에도 강택민주석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양국 우호관계와 경제협력 등 실질관계발전을 합의하였고, 일본의 역사문제에 대하여서도 비평하였다. 또한 현대와 삼성 등 기업을 참관하였고, 경주와 제주도를 관광하였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한·중관계로 인하여 북한은 지난해 12월의 노동신문을 통해 중국을 공개비난했고, 미국과 핵문제처리에서 한국과 더불어 중국

의 배제를 시도하였으며, 중국과 사전협의 없이 대만과 관계의 발전을 추진함으로써 섭섭함을 표시하였다. 중국도 이홍구총리의 지극한 환대, 쌍방의 군사관계발전문제의 공개적인 언급, 노동신문기자의 추방사건, 동북3성 지역에 한국영사관개설협의 등 우회적 방법으로 불만을 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한·중관계의 급속한 발전은 아직 한반도교차승인 구도를 정착시키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상당한 외교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어 오히려 한반도의 불안을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중국은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강택민은 방한에 앞서서 자신의 ‘두개의 한국정책’의 입장에서 북한에 이해를 구하고 대내외적으로 북한을 지지하는 중국의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기 위하여 북경주재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북한노동당 창당 50주년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현재 북한의 지도자인 김정일 앞으로 축하전문을 보냈다. 그 외에도 강택민의 방한을 전후하여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대량의 수해지원, 고위급인사의 20여회의 상호교류 등으로 상호관계를 재확인하였다.

김정일에게 보낸 전문에서 강택민은 북한 김일성의 영도하의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업적을 찬양하고 김일성 사후에 김정일을 중심으로 사회주의건설에 훌륭히 매진하고 있음을 충심으로 축복하였다. 동시에 ‘중조우의’는 ‘중국의 움직일 수 없는 방침’임을 천명하고 현재의 복잡한 국제정세 아래서도 ‘중조우의’의 발전이 “양당, 양국 인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조선반도와 동북아지역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하면서 ‘대대로 이어지고 만고장청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강택민의 한국방문과 연설, 북한대사관의 방문과 김정일에게 보낸 전문내용을 최근의 중국의 대한반도정책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강택민이 중국의 당정군의 최고권력자로서 한국의 정치·경제·사회를 직접 참관한 방문을 성사한 자체가 이미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현대 한·중관계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었다.

둘째, 강택민이 전 한국민을 상대로 한국국회에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와 중국공산당의 입적을 자랑하는 내용의 연설을 할 수 있을 만큼 양국관계는 이제 '편안한 파트너'로 격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양국의 정상이 일본의 역사문제, APEC 등 국제문제에 대하여서도 공동의 발언을 할 수 있을 만큼 국제정치적인 입장에서도 대화와 공조가 가능해졌음을 보여주었다.

넷째, 강택민은 이번 방문기간중 연설 혹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통상적으로 외교관계상 주장하던 '중화인민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정부'라는 것과 '대만문제'와 더불어 중국의 통일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그 만큼 한국이 대만문제에 대해 정치적으로 확실히 양보한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강택민은 남북한문제에 있어서 중국의 역할에 대하여서는 지난 3·4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평화적 대화를 통한 당사자 해결' 등 원론적인 몇가지 원칙을 반복하는 선에서 알버부려 아직도 소극적임을 보여주었다.

여섯째, 한국과 관계발전에 따른 북한과의 상대적인 관계약화라는 모순에도 불구하고 '중조관계'의 기본적인 우의는 절대로 변하지 않음을 방한을 전후하여 실질적인 행동으로 천명하였다. 특히 강택민이 대북한 축하전문에서 사용한 김정일에 대한 공개적 지도자호칭은 그의 정치적 역할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일곱째, 강택민은 자신의 방한과 한국의 대만문제에 대한 철저한 정치적 양보에도 불구하고 6·25참전등 과거문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문제, '조·중우호협력조약'의 문제, 안승운목사 남북문제, 조선족의 문제, 중국행 탈북자문제 등 북한과 관계되는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종래의 기본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음을 재확인해 주었다.

결국 강택민의 방한을 전후한 중국의 대한반도문제에 대한 일련의 언행과 조치들은 자신의 '두개의 한국정책'이 현재 상태로서는 확고한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었으며, 중국은 남북한과 공존체제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강력한 시사를 해준 것이라

고 볼 수가 있다.

강택민은 자신의 방한에도 불구하고 6·25참전 등 과거문제, 정전협정과 평화협정문제, '조·중우호협력조약'의 문제, 안승운목사 납북문제, 조선족의 문제, 중국행 탈북자문제 등 북한과 관계되는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종래의 기본적인 태도는 변하지 않고 있음을 서울에 와서도 재확인해 주었다.

(이규태, 「한·중관계의 발전과 남북관계」)

다. 대북한 정책

- 중국은 북한 사회주의체제를 중국의 안보에 대한 완충지대로 인식하여 북한에서 사회주의체제가 유지되도록 북한에 대한 최소한도의 지원을 계속 제공할 것임.
- 중국은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발생하거나 북한이 한국에 의해서 흡수통일될 경우 중국의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여 북한에 대한 최소한도의 지원정책을 당분간 지속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할 것임.
- 덩소평 사후 중국과 북한은 유대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 혁명이후 세대 지도부간 교류와 접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음.
- 이와 관련, 이붕 총리는 1995년 1월 북한 장철 부총리에게 중국이 북한 김정일정권과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음.
- 그러나 덩소평이 북한 혁명세대 지도자들과 긴밀한 교분을 갖고 있었다는 점과 간부 연경화 정책에 따라 「항미원조」 전쟁에 참전하였던 군간부들이 교체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북한에 대한 중국의 무조건적인 지원정책은 약화될 수 밖에 없을 것임.
- 그 동안 중국은 북한을 한, 미, 일 등에 대한 외교정책을 전개하는데 부담요인으로 인식하여 왔는데, 덩소평의 사망은 장기적으로 북

한·중관계를 혈맹관계에서 단순한 우호협력관계로 변질시키는 계기가 될 것임.

-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은 북한의 무리한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을 지지하기보다는 북한과 미국 이외에도 중국과 한국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임.
- 또한 중국의 지방분권화로 인하여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원조 재공이 현실적으로 곤란해지고 있는 점도 북·중관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중국 동북3성은 북경의 중앙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석유 및 식량 제공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신상진, 「동소평 사후 중국의 국내정세 및 한반도 정책 전망」)

김일성이 돌연히 사망한 이후 중국은 대북한 우호관계를 극명하게 표현하였다. 북한은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유일하게 중국지도부에게 공식발표보다 일찍 알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북한은 김정일의 권력승계에 대한 지지 방침을 조기에 공표하였다. 김일성 사망이후 취해진 중국의 이러한 우호적 조치는 94년초 이봉총리가 전인대회 정부활동보고를 통하여 북중우호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북중우호관계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1988년 중국이 서울올림픽에 참가한 이후부터 1992년 한중국교 수립에 이르기까지 북중관계는 상당히 냉각되었었다. 1991년 한중간에 무역대표부가 교환설치된 이후 한중수교가 임박한 시점에서 북한은 한중수교 자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나 한·중수교는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인바, 북한은 한·중수교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북한에게 충분한 양해를 촉구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한·중수교에 대한 반대급부 차원에서 북한에게 경제적·외교적 지원과 지지를 약속했을 가능성이 있다. 한·중수교 당일 중국외교부 대변인 오건민과 당총서기 강택

민은 한·중수교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간 기존 우호관계가 하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하여 정치군사적으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배경은 다음 몇 가지 차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평화연변에 대하여 공동대응해야 하는 안보적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중소분쟁기간에 북한은 중국에 있어서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았다.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이용하여 북한은 중국과 소련, 양국으로부터 경쟁적으로 지원을 끌어낼 수 있었다. 중소분쟁이후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낮아진 상황에서 북한은 중국, 소련으로부터 냉전시대 만큼 독자적인 등거리 외교정책을 전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그러나 동구와 소련이 붕괴된 이후 중국과 북한 등 나머지 사회주의국가들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체제의 붕괴를 크게 우려할 상황에 처하였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안보적 필요성 때문에 북중관계는 유지되고 있다.

둘째, 직면한 외교환경에 대한 공동이익의 형성이다. 중국이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한 국가전략을 순조롭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김일성 지역의 안정이 필요하다. 김일성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모험주의적 대외정책을 억제해야 한다.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는 중국에 대한 북한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외교적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북한 또한 극단적인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여 미국, 일본 등 서방국가와의 관계개선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국제기구를 통한 국가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는 중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셋째, 경제적 이익의 공유이다. 소련붕괴이후 중·러시아간 무역이 대폭 감소되는데 영향을 받아 중국·북한간 무역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중국·북한간 교역관계를 놓고 볼 때, 중국이 북한의 최대 교역대상국이고, 북한의 총교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1991년의 23.6%에서 1992년에는 28.2%로 증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교

역애의 변화는 중국, 북한 양국의 경제적 의존이 심화되고 있음을 말해 준다. 단순히 무역상의 의존관계 심화뿐만 아니라 중국은 장차 북한이 중국식의 개혁개방을 추구할 경우 북한경제를 자국의 경제영향권에 편입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북한과 우호관계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북한 역시 자국의 경제개발 모델로서 중국을 상정할 경우 경제적 이해의 공유는 심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두만강개발계획과 관련 중국은 북한에게 상당한 양보를 얻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중국·북한간 유대관계가 다음 몇 가지 요소에 의하여 질적으로 변화할 가능성도 있다.

첫째, 체제의 이질성이 심화되는 경우이다. 중국이 경제개혁에 상응하게 정치개혁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정부의 사회주의적 색채가 완화되어 가는 반면에 김일성 사후 등장한 북한의 새로운 체제가 전시대적인 권위주의적 정치형태를 지향할 경우 체제의 상이성이 증가할 것이다. 체제의 상이성이 증가되면 양국관계가 긴장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경제관계에 현실주의가 강조되면 무역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이 무역대금의 경화결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원유수출에 대한 우호가격제를 전면 폐지하게 되면 북한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주게 될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조치는 북한의 경제침체를 가속화시킬 것이며 양국의 경제적 마찰은 양국우호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한중관계 발전이 군사정치적 분야까지 심화될 경우 북중관계는 긴장될 것이다. 중국이 공개적으로 한국과 군사적 협력관계를 강화한다면 북한-중국관계는 긴장될 것이다. 특히 남북한관계가 침체한 군사적 대결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중국의 안보협력이 가시적으로 모색된다면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은 감소될 것이다.

(국방연구원, 「동소평 사후 중국의 변화전망과 한국안보」)

○ 김정일 체제에 대한 조건부 지지

김일성 사망 다음날인 7월 9일 강택민·이봉·교석이 중국의 당·정·전 인대의 대표로서 보낸 전문은 김일성 사망과 김정일 후계에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담고 있는바 이 조문에서 중국은 ① 북한 인민은 김일성의 뜻을 이어 김정일을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를 중심으로 굳게 뭉쳐야 하며 ②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③ 양국간의 우호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당시 김정일에 대한 중국의 지지표명을 무조건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중국이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권력구조 재편을 지지한 것은 김일성과 개인적인 관계 이외에 북한 내부에서 기존 사회주의체제의 변혁이나 정치적 혼란이 없이 김일성 사후의 권력공백을 메울 수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 인물로서 김정일의 가치를 평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김정일체제에 대한 중국의 지지 정도는 대중정책을 포함한 김정일체제의 대내외정책 방향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이 대만의 전세기 운항 허용, 북한 주재 중국관계자들에 대한 통제 강화, 북·미협상 등 주요 사안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거부 등 중국의 입장에서 극히 비우호적인 태도로 비춰질 수 있는 정책을 지속할 경우 중국은 김정일체제에 대한 지지수위를 낮추고자 할 것이다.

결국 중국은 김일성시대와 같이 국익의 손상을 감수하면서까지 김정일체제를 무조건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며, 특히 등소평 사후 봉건적 정치제도하의 대표적인 권력이양 형태인 부자세습에 불만을 갖고 있는 중국이 혁명 2, 3세대들이 집권할 경우 이러한 경향이 더욱 두드러질 가능성이 높다.

○ 경제관계의 현실적 조정

이에 반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중·북한관계는 광범한 차원에서의 재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에

서 중국의 경제적 지원에 상당부분을 의지하여 왔다. 중국 또한 북한과의 정치적 관계를 감안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여 왔으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중·북한의 이러한 불균형적인 경제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중국은 지금까지 그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부리하게 현실화시키지 못했으나, 일단 김정일체제가 안정궤도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면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현실화하고자 할 것이다.

이에 동시에 중국은 북한의 체제유지를 위한 유일한 출로는 경제발전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 스스로가 경제적 자생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제정책의 전환을 요구할 것이다. 즉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정책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기존의 소극적인 태도에서 더 나아가 북한의 실정에 맞는 개혁·개방정책 추진을 적극 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북한이 미·일 등 서방 선진국들과의 관계개선 및 경제교류·협력의 확대가 자신들의 대북 영향력 축소로 직결되는 것은 억제하고자 할 것이다.

즉 중국은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에 따른 북한의 대서방 경제교류·협력 확대가 북한 경제발전의 견인차적 역할 뿐만 아니라 기존 중·북한관계가 약화 요인, 심지어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협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자 할 것이다.

(문흥호, 「최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방향」)

라. 대한민국 정책

- 동소평 사후 중국은 한국으로부터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과의 경제협력 확대정책을 더욱 적극화할 것임
- 그러나 동소평 사후 중국이 성장보다 안정 중시의 긴축정책을 채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국의 대중 투자가 일시적으로 감소되는 등 한·중간 경제관계 발전 속도는 다소 둔화될 가능성이 있음.

- 아울러 장기적으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부담에서 어느정도 벗어나 한국과의 정치·안보적 협력관계를 점진적으로 확대·발전시켜 나갈으로써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증대를 모색할 것임
- 이와 관련, 중국은 미국과 일본의 대북한 관계개선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바, 1995년 11월 APEC 정상회담을 전후하여 강택민·주석의 방한이 성사될 가능성이 큼.

(신상진, 「등소평 사후 중국의 국내정세 및 한반도정책 전망」)

1992년 8월 중국의 대한국정책의 기본방침은 국교수립을 보류한 가운데 민간분야의 경제교류를 확대하는 것이었다. 중국의 이러한 입장에 영향을 준 것은 북한과의 동맹관계 때문이었으며 중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상승시켜준 중소분쟁도 이러한 중국의 기본입장 설정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국은 한국과의 국교수립은 대만통일문제 해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하였다.

1992년 8월, 중국이 한국과 수교한 것은 이러한 기본입장의 변화를 의미한다. 한중 양국은 1992년 8월의 수교를 계기로 냉전체제하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미래지향적 선린우호관계를 구축해가는 상호노력을 경주해 왔다. 역사적인 한중수교를 발표하면서 채택한 6개항의 공동성명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 국민의 이익과 염원에 부응하여 1992년 8월 2일자로 상호 승인하고 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결정하였다.
2.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유엔헌장의 원칙들과 주권 및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가침, 평등과 호혜, 그리고 평화공존의 원칙에 입각하여 항구적인 선린우호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에 합의하였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

하며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입장을 존중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양국간의 수교가 한반도 정세의 완화의 안정, 그리고 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

5.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한반도가 조기에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이 한민족의 영원임을 존중하고 한반도가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한다.

6.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1961년의 외교관계에 관한 민협약에 따라 각자의 수도에 상대방의 대사관 개설과 공부수행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빠른 시일내 대사를 상호교환하기로 합의한다.

한중공동성명은 외교적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 같은 분단국, 통일문제가 역사적 과제로 있는 가운데 한국은 중국을 유일 합법적 정부임을 인정한 반면에 중국은 한국을 유일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실주의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현실속에서, 반세기에 걸쳐 진행되어온 북중우호관계를 고려할 때 중국으로부터 우리정부가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받기를 기대하는 것은 부리인 것도 사실이다.

한중공동성명 내용을 중심으로 중국의 대한국 정책을 분석하면 다음 몇 가지 방향을 찾아볼 수 있다. 첫째, 한반도의 분단현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한반도에는 두 개의 정치적 실체가 국가로서 존재한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둘째,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력에 의한 현상변화를 시도할 경우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시도되건 반대한다는 입장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원한다.

공식적으로 나타난 이와같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방향중 앞의 두 개 사항에 대하여서는 논란이 없지만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중국의 입장에는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을 진심으로 바라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통일된 국가의 예상되는 정체와 대중국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질 것이나 예상되는 통일국가가 중국과 비우호적, 적대적 국가가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 북·미 관계개선 이후 야기될 수 있는 대북관계에서의 영향력 감소를 만회함으로써 대한반도 영향력의 기존 수위를 고수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인식과 정치적 의도에 기초하여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관계 중심의 기존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보다 높은 차원의 정치·외교적 공감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방향은 이봉 총리의 방한, 이홍구 총리의 방중과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이봉 총리의 방한과정에서 중국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한국과의 경제교류·협력 증진에 적극성을 보였으며, 특히 양국의 교역 확대 및 기술합작,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중국은 북·미 관계개선 추이에 맞추어 한국과의 교류·협력을 확대 발전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는 그동안 북한에 대한 부담 때문에 적극성을 띠지 못했던 한국과의 각종 교류·협력을 보다 확대함으로써 한·중 교류·협력에 대한 현실적인 요구를 만족시키는 동시에, 부수적으로 북·미 관계개선 이후의 대한반도 영향력 축소 가능성을 억제한다는 전략적 의도가 개재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흥호, 「최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방향」)

〈참고논문명〉

1. 구종서(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등소평 사후 중국의 정치체제 변화와 한반도」(1995. 4. 11, 통일문제시민학술포럼)
2. 국방연구원, 「등소평 사후 중국의 변화전망과 한국안보」(1995. 1. 국방연구원 「국방논집」)
3. 삼성경제연구소, 「등소평 사후의 중국 정경구도 전망」(1995. 1)
4. 문홍호(서원대 교수), 「최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방향」(1995. 6. 회담사 부국 위촉과제)
5. 신상진(민통연 연구위원), 「등소평 사후 중국의 국내정세 및 한반도 정책 전망」(1995. 2. 민통연 보고서)
6. 이규태(관동대 교수), 「한·중관계의 발전과 남북관계」(1995. 12. 회담사 부국 세미나)

II. 북·일 관계 개선

1. 개 요

- 본 논문 발췌집은 1995년 1년동안 「북·일 관계 개선」문제와 관련하여 발표된 8편의 논문중에서 세부 주제별로 주요 내용을 발췌·편집한 것임.
- 현재 북·일 수교협상은 북한 김정일체제의 유동성과 일본의 국내정치 상황, 한국정부의 급격한 대북접근 자체 요청 등으로 담보상태이나 수교협상이 재개될 경우 양측 모두 타결에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는 의견이 다수였음. 그 근거는
 - 최근 제네바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고 있어 핵문제라는 수교협상의 장애물이 제거되었고
 - 일본은 전후처리를 달성하고 한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대북수교를 최대 외교과제로 추구하고 있으며
 - 북한도 경제난을 타개하고 외교적 고립의 탈피를 위해서는 대일 관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 등임.
- 북·일 관계개선이 남북관계에 미칠 긍정적 영향은 ① 주변4강에 의한 남북한 교차승인구도 완성 ② 북한체제의 개방·개혁 촉진 ③ 북한 경제난 완화 ④ 통일비용 절감 등이 제시되었으며, 부정적 영향으로는 ① 북한의 남한배제 지속 ② 남북한 분단구조 영속화 ③ 주변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 확대 ④ 북한이 남북경제교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 등이 제시되었음.
- 한국정부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입장으로는 ① 한·일정부간 사전협의를 위한 외교적 협조체제 구축 ② 한반도 평화구축 계기로 활용 ③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견제 ④ 남북경제교류협력에 활용방안 강구 ⑤ 일본의 과거청산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응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2. 북·일 관계개선 전망

가. 북·일 수교협상 의제분석

1990년 11월에는 역사적인 3당선언을 기초로 본격적인 수교교섭을 위한 예비절충이 북경에서 이루어졌다. 북경의 예비회담에서 북한과 일본은 정부간 수교협상에서 다루어져야 할 의제를 기본문제, 경제적 제문제, 국제문제, 기타문제의 네가지로 합의하였다. 1991년 1월부터 약 2년에 걸쳐서 이루어진 8차례의 북일정부간 교섭에서는 상기의 네가지 의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북일 양국은 각 의제에 관한 토론에서 근본적인 견해차를 노정하였고 이러한 대립은 결국 해소되지 못한 채 결렬상태로 돌입하였다. 그러면 8차례의 회담에서 북한과 일본이 개진한 기본전해를 각 의제별로 검토해 봄으로써 북일교섭의 현황을 고찰하도록 하자.

① 기본문제

양국간 국교교섭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문제는 과거 일본의 조선식민지 지배에 대한 역사인식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초점이 맺혀져 있다. 즉, 일본의 조선지배를 규정한 일련의 구조약의 해석을 두고 양국은 첨예한 대립을 보였다. 1991년 1월 30일 제1차 교섭에서 북한의 전인철 외교부장은 일본이 과거 조선인민에게 입혔던 재난과 손실에 대한 문서상의 공식 사죄를 요구함과 동시에 「1910년 한일합방조약을 비롯하여 일본이 구조선에게 강요했던 모든 조약과 협정이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북한측은 일본의 조선식민지배를 규정한 일련의 구조약이 일본의 강압과 무력에 의해 강요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불법이며 무효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측은 1991년 3월 11일의 제2차교섭에서 한일합방조약을 비롯한 구조약은 이미 무효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합법적으로 체결, 실시된

것이라는 입장을 주장하여 북한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였다. 구조약의 무효시점에 관한 대립은 제2의제인 경제문제와 동전의 양면관계를 구성하고 있는 사안으로서 양국간 교섭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기도 하다. 즉, 북한의 주장대로 당초부터 구조약이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을 일본이 인정한다면 당연히 불법점령에 따른 배상 내지 보상을 지불해야 하고 반면 일본측의 주장대로 이미 무효가 되었지만 합법적으로 식민지배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다면 민사상의 권리, 의무관계를 재산청구권의 범주 내에서 처리하게 되는 것이다.

기본문제에 관한 또 하나의 대립은 북한의 법적인 관할권의 범위를 둘러싼 양국의 상이한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즉, 일본측은 한일관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한다는 관점에서 북한의 관할권의 범위를 정전라인의 북쪽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반해서 북한측은 「조선은 하나」라는 입장에서 분단국가를 인정하는 표현을 피할 것을 주장하였다. 즉, 북한은 국가간의 국교수립에서 반드시 관할권의 명기가 논의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굳이 관할권을 표기해야 한다면 「조선은 하나이며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전제가 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전개하였다. 세번째로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양국간의 관계를 생각하는 기초로 삼아야한다고 주장한데 반해서 북한은 동조약의 체결국이 아니므로 동조약과는 무관하게 양국관계를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였다. 즉, 일본측은 북한과의 수교교섭의 전제가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의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반도의 당사자와 일본과의 직접교섭에 의한 재산청구권 해결」의 틀 속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이것은 바로 한일수교의 기초이기도 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일본측으로서는 한일관계에 이어 북일관계를 수립하는 것은 강화조약 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청구권해결을 통한 관계정립의 공백부분을 메우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북한측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한민족이 일본과 교전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일관계의 기초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즉, 북한측의 주장에 따르면 북일교섭은 전승국과 패전국의 관계를 기초로 하여 논의되어야 할, 사실상의 강화조약의

성질을 띤 협상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② 경제적 제문제

북일교섭의 의제 중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다름 아닌 제2의제 경제적 제문제이다. 이 의제에 관해서 북한은 일본에 대하여 다음의 세가지 물질적 요구를 제기하고 있다.

첫째, 식민지 시대는 조선민족과 일본이 사실상의 교전상태에 있었고 일본의 패전에 의해 조선의 해방이 실현되었다는 인식에 서서 일본은 북한에 대해 전쟁배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였다. 둘째, 일본의 조선식민지배는 조선 인민에게 막대한 손실과 재난을 입혔으므로 일본은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일본은 전후 45년간 북한에 대해 적대정책을 추진하였고 이 결과 북한이 입은 피해와 손실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부분은 가네마루의 방북시 실현된 3당선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북한에 대한 전후보상의 의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여 그것을 바탕으로 제기하고 있는 요구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이 일본에게 전쟁배상의 요구를 제기하는 이유로서 전인철 외교부부장은 제1회 회담에서 「과거의 조일관계는 역사적인 견지로 보거나 법률적인 견지에서 보아도 식민지와 종주국의 관계라기보다는 침략을 강행한 일본과 침략에 대항하여 싸운 조선 사이의 교전관계였으며 특히 1930년대부터 김일성장군의 지도하에 조선인민군은 항일전을 정식으로 선포하고 15년간 일본군과 싸워서 승리하였다. 전쟁에는 주권국가간의 전쟁도 있고 식민지 전쟁, 식민지 해방전쟁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후 45년간의 보상을 제기하는 이유로서 북한의 전인철대표는 다음의 네가지를 들었다. 첫째, 일본은 조선의 분열에 책임이 있다. 둘째, 한국전쟁시기에 일본군은 미침략군의 보급기지, 수리기지, 공격기지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셋째, 한국전쟁시기에 일본군은 해상작전 등에 참가하였다. 넷째, 일본은 한국전쟁후 전쟁피해를 극복하기 위해 투쟁하는 조선인민에 대하여 적

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러한 북한의 주장에 대해 일본측은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일본측은 한일합방조약과 그 이전에 맺어진 일본과 조선과의 일련의 조약 및 협정은 합법적으로 체결 실시된 것이며 따라서 일본과 조선은 결코 전쟁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북한의 배상요구를 일축하였다. 즉, 일본측은 당시 한반도에는 주권국가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김일성 빨치산부대는 독립부대로서가 아니라 중국공산당의 동북인민혁명군의 일부로서 정면대립하였다. 일본측은 이어서 북한이 제기한 전후보상에 대해서도 이를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즉, 한국전쟁에서 일본이 한국을 지원한 것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것이며 전후 45년간 국교가 수립되지 못했던 것은 동서냉전 하에서의 심각한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정책 때문이므로 일본이 전후공백과 관련하여 북한에게 보상할 의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일본측은 정부간 교섭에서 전후보상의 의무를 규정한 3당선언은 어디까지나 정당간의 합의에 불과하며 일본정부는 3당선언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여 왔다.

물질적 보상부분에서 일본측이 북한에게 제공해야 할 것으로 인정한 것은 재산청구권 부분이었다. 일본이 경제문제의 합당한 의제로 인정한 것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청구권의 문제에 관해서일 뿐이었다.

즉, 일본측은 일본과 조선이 영토적으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재산, 청구권의 처리가 미결상태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 부분이 국교교섭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였던 것이다. 일본이 지불해야 할 것으로 인정한 재산청구권은 조선인이 가지고 있었던 연금증서, 유가증권, 우편저금 등과 징병, 징용으로 연행된 사람들에 대한 미지불 임금 등으로 구성된다. 이러한 일본의 태도는 한일회담에서도 일관되게 견지된 것으로 일본이 북한과의 교섭에서 한일관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도 따지고 보면 보상, 배상방식이 아닌 청구권방식으로 물질적

과거청산을 마무리짓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불질적 보상은 재산 청구권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청구권의 구체적 인 대상을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또 재산청구권 주장의 정당성을 입증해 줄 불질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의 문제는 여전히 대립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일본측은 재산청구권은 법적 근거가 확실한 것에 한정 하며 재산청구권 요구는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의 제출이 있을 경우 이에 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측은 재산청구 권을 식민지 지배에 의한 피해와 손실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해석하고 있어서 재산청구권의 범위문제에 관해서 일본측과 커다란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또 재산청구권을 뒷받침해야 할 불질 자료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일본측 이 내놓아야 할 성질의 것이지 북한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 하였다.

③ 국제문제

기본문제와 경제적 제문제는 기본적으로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와 관련한 역사청산과 직접 관련된 이슈로서 그 대립의 구도가 주로 북한이 일본에 대 해 공세적인 입장에서 방어하는 패턴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국제문제는 대 립의 구도가 상기의 이슈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이 북한에게 요구를 제기하고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 국제문제에서 다루어진 중심적인 이슈는 주로 일본이 북한에게 핵개발의혹을 해소할 것을 요구하고 북한이 이러한 요구에 반발함으로써 발생한 대립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측은 국교교섭의 의제를 설정할 당시부터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중요 한 쟁점으로 부각시켰으며 핵개발의혹이 제거되지 않는 한 교섭의 진전에 응할 수 없다는 주장을 개진하였다. 즉, 제1차회담에서 일본측은 핵개발의혹 이 있는 국가와, 경제적 지원을 전제로 관계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은 국내여 론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는 점을 내세워 북한의 핵의혹 해소를 수교교섭의 전제로 내세웠다. 이에 대한 북한측은 핵문제는 북일교섭의 중심의제가 될

수 없으며 북한핵 문제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하여 해결할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제2회 회담에서 북한측은 북한은 핵개발 능력이 없으며 개발할 의사도 없다는 점을 천명하고 핵문제는 남한의 미군보유의 핵과 연계시켜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은 1991년 12월 한국과 기본합의서를 채택하고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을 합의하는 한편 1992년 1월 30일에는 IAEA와의 핵안전협정에 조인하는 등 핵문제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은 제7차 회담에서 IAEA에 의한 핵사찰만으로는 북한에 대한 핵의혹이 완전히 불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인식 하에 남북한의 상호핵사찰을 북한에게 요구하는 강경한 태도로 나왔다. 즉, 일본은 북한이 핵 재처리시설의 보유를 포기하고 남북 상호사찰과 남북비핵화 공동선언을 착실히 시행함과 동시에 IAEA의 핵사찰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는 한 북한의 핵개발의혹은 해소될 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핵의혹의 해소를 대북교섭 진척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IAEA 사찰을 수용하였으므로 핵문제는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일본이야말로 다량의 플루토늄을 저장함으로써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의도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어쨌든 핵문제는 2년간에 걸친 북일 정부간 교섭의 최대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결국 북일교섭을 파탄으로 이끌어간 가장 큰 대립의제였음에 틀림없다. 1992년 11월 8차례에 걸친 정부간 교섭이 결렬된 이후에도 핵의혹 문제는 해소되기는 커녕 더욱 악화되어 한때 북일관계는 물론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최악의 국면으로 이끌어 갔다. 특히 1993년 6월 북한이 NPT의 탈퇴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고 동해상에서의 「노동 1호」 미사일 발사실험을 실시하는 등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고 이에 대항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북한 경제제재의 분위기가 확산되어 북일교섭은 파국의 일보직전까지 치닫게 되었다. 그러나 1994년 10월 21일 북한과 미국간의 제네바 기본합의가 성립됨에 따라 북한핵 문제는 일단 해결의 가닥이 잡혔으며 이로써 북일수교교섭의 최대장애요인이었던 핵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불

른 제네바합의는 북한핵 의혹을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핵문제를 동결시킨 것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핵문제가 북일교섭의 새로운 장애물로 등장할 소지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④ 기타문제

마지막으로 정부간 북일교섭의 또 하나의 대립의제로서 등장한 것은 「이은혜 문제」이다. 즉, 이은혜 문제란 1991년 5월 제3차회담에서 일본측이 1987년 KAL기 폭파사고의 주범 김현희의 일본어교사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여성 이은혜의 신원확인을 정식으로 북한에게 요청함으로써 새롭게 출현한 대립사안이다. 일본측의 신원확인 요구에 대해 북한측은 이 문제가 남한에 의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북한과 전혀 관계없는 문제를 수교교섭에서 제기하는 것 자체에 강한 불만을 제기함과 동시에 발언의 즉시 철회와 사죄를 요구하고 회담자체를 보이콧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잇따른 막후질충에서 일본측이 이은혜의 신원확인을 요구하지 않기로 약속함으로써 일단 잠복되어 4개월만에 제4차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측은 제8차회담에서 이은혜의 신원확인 문제를 재차 제기하였고 북한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여 회담장을 퇴장하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이은혜문제가 정부간 북일교섭을 절렬시킨 제1의 원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향후 제기될 것으로 보이는 북일교섭에서도 이은혜 문제는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는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등장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돌이켜보면 북한과의 수교회담에서 일본은 이은혜 문제를 필요에 따라 중요한 대북 카드로 사용해왔으며 앞으로의 대북교섭에서도 이 문제는 일본의 대북카드로 사용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기타문제의 또 다른 대립의제로서는 제일조선인의 법적지위 향상 문제와 일본인 처의 모국방문 문제가 있다. 북한측은 1차회담 이래 조총련에 대한 탄압중지와 제일조선인의 체류자격 개선 등 제일본 조선인의 법적 지위 개선을 요구해왔으며 일본은 이에 대해 일본측은 조총련에 대한 탄압을 행하

지 않고 있으며 재일조선인의 법적 지위개선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대응하였다. 한편 일본측은 재일조선인과 함께 복송된 일본인 처의 모국 방문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북한측은 이에 대해 국교가 정상화되면 일본인 처의 자유왕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원덕, 「북·일 국교교섭과 일본의 대북정책」)

나. 일본의 한반도 정책

일본은 한반도통일이 민주주의 및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대함과 아울러 통일과정에서 제기될 문제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첫째, 북한의 핵개발 및 미사일배치는 일본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므로 북한의 핵개발에 적극적인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일본은 민주적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제조하려는 의도를 갖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일본은 한국과 함께 북한도 핵시설에 대하여 국제원자력기구의 핵사찰을 받고 남북상호핵사찰을 수용함으로써 한반도가 비핵지대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다.

둘째, 일본은 한반도 평화를 국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다자간 접근이 시도될 경우 이러한 접근을 통해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의 핵의혹이 해소되기를 바라고 있다. 일본의 전외무차관 하마다다쿠치로(寶田卓二郎)는 1992년 3월 9일 베이커 미국무장관의 「2+4」 제의에 대응하여 일본과 미·중·러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남북한이 종속적으로 참여하는 한반도문제 토의를 위한 「4+2」 회담을 제의하였는바, 이는 한반도문제 논의를 위한 회담에서 일본의 발언권을 증대시키려는 의도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은 남북협상 진척 상황과 남북한 및 미국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 보장장치로서 「2+4」 구도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구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국의 발언권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셋째, 일본은 남북한간 교류협력 확대가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자국의 대북한 투자확대 등 대북한 경제진출 기회를 증대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일본은 남북한간 경제교류가 진전될 경우, 북·일 수교협상도 급진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남북한교류에 대한 지지입장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현상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다.

넷째, 일본은 자국의 안보를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한반도통일이 이루어진다면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이러한 입장에 회의를 보이고 있고, 일본은 한국통일을 원치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예를들면 지난해 노벨상수상작가인 오에(大江健三郎)는 「일본은 한반도 분단상태를 즐기고 있으며 한국경제가 실패하기를 은근히 기대했던 사람이 더 많았다」고 그동안 일본의 자세를 비판했다.

다섯째, 일본이 구체적으로 대한반도정책의 내용과 방법을 정의하려면 국내정치에서 국민적 합의가 형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민당 붕괴이후 국내정치적 혼란은 이러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일본 국내의 경제개편이 이루어지고 안정된 정권이 들어서면 대한반도정책의 기초 및 정책이 수립될 것이다.

(김영춘, 「일본의 한반도 정책」)

다. 북·일 관계개선 전망

현재 한국정부는 북일수교 및 북미수교를 남북한관계의 개선과 링크시키겠다는 의도하에 급격한 대북접근을 자제해 줄 것을 미국과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 한국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대남전략이 근본적으로 수정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즉, 북한은 대남사회주의 혁명전략을 포기하고 있지 않으며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시도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정책을 포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이러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이 북한과의 관계를 언제까지나 현재의 미수교상태로 유지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냉전시대의 그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북미제네바협정으로 확인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북미제네바협정의 기본골격이 대체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따라서 핵개발과 관련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연락사무소개설은 물론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실현시키는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머지않아 재개될 북한과의 수교교섭에서 북한이 만약 기본문제와 보상문제에서 보였던 기존의 입장을 대폭수정하여 한일조약과 같은 수준으로 대일요구의 강도를 낮출 경우 일본으로서도 북한과의 수교를 더이상 미룰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한국의 조기수교반대 입장표명이 일본의 대북정책에 미칠 영향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외교적 고립과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대북교섭에서 유지하고 있는 대일자세를 완화시켜 대일관계 타결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특히 북한은 올해 들어 전후최대의 수해피해를 입었고 이러한 피해는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식량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에게 30만 톤의 쌀지원을 받아들인 바 있으며 국제사회에도 국제기구를 통해 쌀제공을 요청한 바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북일관계의 타결은 대립의제에 관한 북한의 대일양보라는 방식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이원덕, 「북·일 국교교섭과 일본의 대북정책」)

냉전이후시대 국제질서변화 및 미·일 동반자관계 구축에 따른 일본의 영향력 증대 그리고 대북한 수교협상 과정에서 일본이 보여준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일본은 한반도에서 장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에 입각한 독자적인 남북한 외

교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향후 미국의 동북아 질서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될 것이다. 일본은 향후 미국의 동북아 정책 혹은 미·일관계의 질적 변화에 적응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대한반도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일본은 대북한 접근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일관계에 기초한 안보 및 경제적 이익과 한국의 반응을 고려할 것이다. 일본은 북한이 한국에 대하여 위협이 되는 한 자신에게도 잠재적인 위협이 되며, 일본이 미국과 안보동맹을 맺고 있는 한 한국과 공동의 안보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주변 4강은 한반도 통일로 빚어질 수 있는 세력균형의 붕괴가 역내 불안을 야기시킬 가능성을 상정할 때, 통일을 적극 지지해야 할 입장이 아니다. 역내 국가들에게 있어서 한반도 통일은 현상타파의 의미를 갖고 있는바, 통일한국에 대한 뚜렷한 전략적 구상이 결여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역내 국가들은 한반도의 현상유지(status quo)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한국이 주도하는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여전히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한편, 급격한 통일이 초래할 역내 세력균형 변화가 수반할 동북아 지역내 불안정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한편, 일본은 전통적으로 한국 편향의 남북한 외교를 추진해 왔으나, 남북한관계가 일본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전되고 한반도 통일로 발전되는 데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무라야마 정부는 일본의 국제적 지위 제고를 모색함에 있어서 과거사와 관련하여 주변諸國에 대한 명백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나, 현재 일본정부가 추구하는 국제공헌은 세계의 평화와 균축의 실현 및 국제역할 증대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일본정부가 핵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전후처리의 일환으로 모색하는 데는 제약을 느낄 것이나 자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제고라는 측면에서 수교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할 것이다.

(김영춘, 「일본의 한반도 정책」)

일본의 자민당, 사회당, 신당 사키가케와 북한의 노동당간에 수교교섭 재개를 약속하는 4당합의가 지난 95년 3월 30일 평양에서 이루어졌다. 베를린에서 개최된 북·미 경수로 전문가 회담이 별다른 성과없이 폐막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이라서 단순히 북한과 일본간의 수교협상재개 차원만으로 인식하기 힘든 시기상의 미묘함이 있었다. 이에 대해 한국내에서 핵협상에서 한국이 배제되고 있다는 불만과 함께 북-일 수교문제에서도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북한과 일본의 수교는 기정사실이며 다만 시기상의 문제만 남아있는 것이므로 수교에 따른 남한의 배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수교에 따른 기회 활용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 90년 9월 3당 합의 공동선언 이후 총 8차례의 실무접촉을 가진 양국은 92년 핵문제의 발발 및 이은혜 송환문제 등으로 협상을 중단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일본은 북한과의 수교교섭을 위해 水面下의 작업은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경주재 일본대사관에 북한문제 일본인 전문가를 파견하여 북한과의 핫라인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으며, 김일성 사망이후 북경에서 당국자간의 접촉('94.8.23~25)을 가졌고, 일본의무성 관리 또한 이를 확인하였다. 특히 일본의 村山 총리는 대북수교를 적극 추진할 의사를 거듭 표명하였고('94.11.16~'95.1.15), 북한도 중앙통신을 통해 대일관계 정상화 의지를 표명('95.1.15)한 바 있다. '95년 2월 싱가포르에서는 자민당의 保利耕輔 문부상과 김용순 노동당비서의 측근인 金養建 당중앙위 국제부 부부장이 비밀리에 접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와 같이 일본정부는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표면적으로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의 공조체제를 강조해 온 반면, 실질적인 접촉은 지속적으로 해온 것이다. 이는 정치·경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번 4당 공동선언이 내용상 수교협상을 재개한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진전이 없을 정도로 급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도 미국정부도 곧바로 이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미루어 북미간 핵협상과 연계되어 있음도 추론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북·일 수교 문제도 핵협상 및 북·미수교와 연계되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본 정치권은 과거 미국과 중국의 수교당시 일본이 미국에게 뒤쳐진 상황을 북한과의 수교시에는 재현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주장이다. 미국보다 앞설 수 없다면 적어도 동시수교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동용승, 「북·일 수교과정 및 수교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북일간 수교 교섭이 재개되면 양국간 현안문제에 있어서 북한이 대폭 양보해서 급속히 타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사람이 많다. 그것은 북한이 일본과의 조기수교를 통해 심각한 경제난을 타개하고 외교상의 고립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절박한 대내외적 상황에 직면한 것으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북일수교와 관련하여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항의 하나인 북일수교가 남북한관계와 어떤 연관하에서 진행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서 회담의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즉, 남북대화의 진전여부와 북미관계 개선의 속도를 감안하면서 북일관계를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일본이 남북한 관계개선을 북일수교협상의 조건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북미·북일관계가 정상화되면 남북관계는 정체를 면치 못한 가능성이 크다. 그 이유는 북한이 체제수호적 개방을 지속하는 한 남한의 진출확대가 체제붕괴의 위협으로 간주되어 자본과 기술을 일본이나 구미로부터 도입하는 것을 보다 선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일간 경제협력을 막아온 것은 경제적 조건이 아니라 양국간의 정치적 장애이었다. 여전히 북일수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경제적 조건이 성숙하더라도 일본의 대북한 경제교류의 확대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정부의 공식적인 교류의 촉진과 보호가 없이는 일본기업들은 조사단의 파견, 연구접촉 등의 활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이우현, 「북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한국의 북에 대한 태도로서는 환상적 진보론, 환상적 극우론, 온건적 현실론의 3가지가 있다고 한다. 일본국내의 반응을 이것을 참고로 분류한다면, 먼저 환상적 진보론과 비슷한 「북한예찬론」은 거의 소멸하거나 영향력을 상실했다. 북과의 체제적대결의식이 회박한 일본에서는 판에 박힌 환상적 극우론은 드물다. 북, 특히 김정일영도하의 북한이 전통적인 혁명노선과 폐쇄적 사회주의를 견지하려고 하고 있다 하면서 「공존불가능론」을 강력하게 견제하고 있는 것이 현대 코리아연구소를 중심으로 하는 논자이다.

그들은 얻기 힘든 정보를 수집하면서 북이 완강하게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있으며 경제악화를 폭력에 의한 단속으로 대응하고 있고 따라서 미국을 포함한 일한 양정부의 대북협력은 김정일체제에 대한 지지 밖에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의미는 자기들이야말로 「진짜」 현실론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하여 와타나베 방북단을 마련한 사람들이나 그들을 지지하는 논자들은 상기 3분류중의 온건적 현실론자에 속하는 지도 모른다. 「일북관계개선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공헌한다. 일본의 경제협력이 실행된다면 북도 개방화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카토 코이치 자민당 국회의원의 주장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일본의 대북접촉의 전망은 김정일체제가 당분간 계속된다 할 적에는 마지막 온건적 현실론이 얼마나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가네마루, 와타나베 방북단의 2가지 의원 외교가 일단 실패 혹은 좌절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국내에서 그 움직임이 단기간에 힘을 되찾는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국교수립까지 가지 않아도 일북간의 정치환경에 아무런 개선이 없는 한 민간기업에 의한 대북투자는 물론 무역면에서도 크게 진전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관광만은 북쪽에서 그만한 노력이 뒤따르면 상당한 수요를 불러 일으킬 수 있을 것이다. (谷浦孝雄, 「일본의 대북접촉 : 현황과 전망」)

3. 북·일 관계개선이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

가. 남북한 교차승인 구도의 도래

어쨌든 한국으로서도 북·일간의 교섭타결과 북·일간 수교는 미지않은 장래에 도래할 하나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일수교는 반드시 불리한 상황전개가 아니라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북한의 체제붕괴에 의한 급격한 흡수통일이 한국의 가능하고도 현실적인 통일정책이 아니라면 우선 현단계에서 요구되는 과제는 남북한의 공생구조, 평화공존체제를 확립하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과 더불어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하여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수립한다면 주변 4강에 의한 교차승인구도가 완성되는 것이고 이는 곧 북한을 국제사회의 무대로 끌어내는 효과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미국, 일본과의 수교관계를 맺어 교차승인의 구도 하에서 국제사회에 나오는 경우 한국이 구체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 북한이 일관되게 유지해온 대남혁명전략을 상대적으로 완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 설사 북한의 대미, 대일수교 의도가 한국을 고립시키고 이른바 그들의 국제혁명전략의 강화에 있다손 치더라도 수교후의 상황전개가 북한이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로 미국, 일본과의 관계가 심화되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은 부력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미일과의 수교로 자유전영과의 교류와 접촉의 폭이 확대되면 될수록 폐쇄적이고 고립적인 상황하에서 추구된 북한의 국가목표도 수정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북한의 대일, 대미수교는 필연적으로 북한체제의 개방, 개혁을 촉진시킬 것이다. 북한체제는 어느 의미에서 외부의 적대세력에 의해 포위되어 있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만 비로소 내부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권력구조로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와다 하루키 교수는 북한체제를 유격대 국가라고 불렀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북한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수교를 실현한다는 것은 역으로 체제의 정당성의 근거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사상 유래없는 전횡적인 유일지도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역설적으로 미국, 일본, 남한이라는 압도적인 대북포위망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북미, 북일수교는 오히려 북한체제의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는 곧 체제변화를 촉진시키는 계기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추측된다.

셋째, 남북한 교차승인의 구도는 북한의 투명성을 제고시키고 북한의 대외 행동을 예측가능한 틀 속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국제냉전의 종결과 전세계적인 비군사화 경향 속에서도 한반도의 군사적 대립상황은 조금도 개선되고 있지 못하며 남북한간의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은 여전히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물론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군사적 상황이 지속되는 제일의 이유는 북한체제의 불확실성에 있다. 만약 북미, 북일관계가 정상화된다면 적어도 북한의 국제적 투명성은 증대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북한의 행위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북·일수교, 북·미수교와 그의 결과로 오게 될 남북한 교차승인 구도는 결코 한국에게 불리하지 않은 질서라고 생각된다. 물론 교차승인의 구도가 남북한의 분단구조를 영속화시킬 수 있으며 주변 4강의 한반도 문제에의 강한 개입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이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독일통일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주변 강대국의 교차승인이 반드시 평화통일의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주변국의 교차승인을 통해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인 제도화 내지 보장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현단계의 가장 필요한 과제는 극단적인 남북한간의 군사적 대립상황을 상대적으로 완화, 해소하고 예측불가능한 북한체제의 투명성을 증대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이는 통일을 위한 불가결한 단계로서의 남북한의 공생, 공존

의 구조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전제이기도 하다.

(이원덕, 「북·일 국교교섭과 일본의 대북정책」)

나. 청구권자금의 유입과 북한의 경제난 해소

남북한의 공존공생의 구조가 확립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교차승인구도와 더불어 북한의 심각한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으면 안된다. 북한의 경제적 곤란은 폐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경제체제의 비효율성과 군사부문에 편중된 경제운영에 그 기본적인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체제개혁이 없는 개선될 여지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일교섭이 타결되고 일본으로부터 대규모의 자금과 기술이 도입된다면 일시적으로나마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는 있을 것이다.

북·일교섭이 타결될 경우 어느 정도의 액수가 제공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알 길이 없다. 지난 2년간의 정부간 교섭에서는 명복을 들리싸고 배상과 보상을 요구하는 북한의 입장과 재산청구권을 고집하는 일본의 입장이 대립된 채 담보상태를 면치 못한 바 있다. 일본은 재산청구권의 테두리 안에서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고 자료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불에 응하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십분 일본에 양보하여 재산청구권의 범주 안에서 해결을 도모한다 하더라도 청구권의 법적인 근거에 관해서 양측의 입장이 일치될 가능성은 전무하며 더욱이 청구권의 내용을 자료로 입증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결국 이 문제는 총액방식에 의해 정치적으로 해결을 꾀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일간의 교섭에서 총액에 관한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논의되었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언급되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으나, 북한은 약 100억 달러 이상의 금액을 요구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일본측은 한일조약 때의 금액을 준거로 하여 금액을 제시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시 무상공여 3억달러, 유상 2억 달러가 청구권, 경제협력자금으로서 제공되었으며 그외의 상당액이 민간차원의 형태로 도입되었다. 5억달러의 금액은 그간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현재의 가치로 환산하면 약 2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일교섭이 타결된다면 적어도 20억달러 이상의 자본이 북한에 도입될 것은 틀림없다. 여기에 상업차관이 첨가된다면 북한에 제공될 액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어쨌든 북한의 경제규모나 현재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감안할 때 일본으로부터 제공될 청구권자금이 북한경제에게 줄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다. 우선 90년대 이래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과 에너지부족을 해결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다. 산업의 인프라스트럭처를 재건하는데도 요긴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이 북한에 제공하게 될 자금은 자본의 형태가 아닌 상품과 용역의 형태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한 이래 전후처리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 뿐 아니라 동남아 국가에게 청구권 또는 배상을 지불하여 왔으나 이 경우 일본은 일관되게 자본재와 용역의 형태로 지불하는 형식을 취해왔다. 북한에게 지불하게 될 자금도 예외가 아니다. 즉, 일본의 대북 지불자금은 대체로 일본의 자본재와 기술 및 용역의 형태로 제공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자금은 대체로 북한의 산업기반 시설을 재건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북한은 인프라스트럭처의 만성적인 노후화와 폐쇄문제에 직면하여 50%를 넘지 않는 산업가동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일본자본이 북한에 유입되면 북한의 군사력 강화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자본은 프로젝트주의에 입각하여 제공되기 때문에 일본자본의 직접적인 군사전용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 체크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프로젝트주의란 일본이 정부개발원조를 실시할 때 적용하는 한 원칙으로서 지불자금의 용도를 일정한 개발프로젝트의 실시에 한정하여 자본재와 기술의 형태로 제공하는 방식

이다.

일본의 청구권자금이 북한에 제공될 경우 그것이 남북한 분단체제에 주는 영향을 한국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자. 첫째, 일본의 자본제공은 단기적으로 북한의 급격한 체제붕괴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경제난을 고려할 때 밖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경제의 파탄이 도래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급격한 체제붕괴는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내부의 분열을 초래하여 내전의 양상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높으며 그렇게 될 경우 남북한의 군사적 충돌로 상호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상황의 도래는 남북한의 관계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이다.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체제붕괴가 가져올 치명적인 결과를 생각할 때 일본의 청구권자금이 단기적인 체제붕괴를 방지하는 수단이 된다면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 일본의 청구권자금 제공은 장기적으로 한국이 지불하게 될 통일코스트를 줄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이다. 통일이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이루어질 지는 매우 예측하기 어려우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한국이 통일의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은 분명하다. 남북한간의 체제경쟁은 어느 면에서 이미 한국의 승리로 귀결되었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통일전략의 핵심은 얼마나 적은 코스트를 지불하고 통일을 이룰 수 있는가의 효율성의 문제로 좁혀진다. 인프라스트럭처의 복원과 재건을 수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그 시기에 따라 비용의 규모가 좌우될 수 있다. 즉, 북한의 노후화되고 폐쇄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빠른 시일 내에 재건하지 않고 방치해 둔다면 재건에 소요될 코스트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총체적인 통일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조기에 일본의 청구권자금이 북한에 유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청구권자금 유입은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전후 북한은 자력갱생의 원칙 하에 자족적인 경제체제를 지속시

켜왔다. 이러한 경제체제는 엄청난 비효율과 낮은 생산성을 결과시켰고 이것이 오늘날 북한의 경제침체의 기본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청구권자금의 유입과 그것을 매개로 한 일본과의 경제교류가 확대된다면 북한은 스스로의 의사와 관계없이 경제체제의 대외개방의 압력을 받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대외경제개방이 추진되면 그것은 정치체제의 개혁 움직임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북한의 체제논리를 고려할 때 급격한 대외경제의 개방과 정치체제의 개혁이 실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적어도 일본의 청구권자금의 유입이 북한의 대외경제정책과 정치체제의 개혁을 촉진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리라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평화적인 통일을 실현시키기 위한 기본전제가 북한체제의 변화라고 한다면, 청구권자금의 북한유입이 가져올 체제변화 가능성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원덕, 「북·일교섭과 일본의 대북정책」)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는 북한경제부문에 실질적 활력소를 제공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력소가 제대로 작용하여 북한경제가 회생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이 북한의 정책변화까지 유도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는 일본으로부터의 유입자금이 군사용 및 이른바 주식자금으로 전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현재 북한경제는 군사부문이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군산복합체의 중공업 우선정책으로 인하여 심각한 산업간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북한경제의 사활은 이러한 산업간 불균형, 즉 군사공업부문을 최소화하고 경공업을 중심으로 한 민수 및 수출산업을 여하히 진작시킬 것인가에 달려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일본자금의 유입시 한국 및 미국은 북한이 군사용으로 전용할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며, 이를 일본측에서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전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 생산부문에서 주식물자의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만일 김정일이 자신의 체제유지를

위한 비용으로서 이러한 자금을 사용할 경우 북한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둘째는 자력갱생을 포기해야 한다. 일본으로부터 자본이 들어가고 이를 수용한다는 것 자체가 자력갱생 원칙을 상당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자금지원에 따른 각종 기술 및 노하우 지원시에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일본의 도움은 필요치 않다는 고집을 내세우게 되면 투자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북한의 경제난과 경제정책방향의 변화에 근거하여 일본과의 수교 이후 북한측이 일본의 유입자본을 활용할 각 분야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기간산업의 확충

김일성은 93년, 94년 신년사에서 기간산업의 확충을 강조한 바 있다. 북한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기계, 금속, 철도, 비료 등의 기간산업은 그동안의 경제침체로 인하여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현재는 거의 가동중단상태에 있다. 지난 95년 6월 일본과의 쌀 제공협상이 한창이던 중에 일본의 모 종합상사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북한 김용순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홍남에 있는 질소비료공장의 설비대체와 관련한 투자조사 방문이었다. 이 과정에서 일본측은 북한에 대해 투자타당성이 아직은 없으므로 한국과 20년 장기공급계약을 맺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충고와 함께 국교정상화가 되고 일본의 자본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제검토해 보자는 건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북한 당국이 기간산업의 설비대체에 대해 어느 정도의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철강, 화력발전, 비료, 철도·운송부분, 화학분야등 북한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업으로서 북한경제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인 것이다.

② 수출산업의 육성

94년 김일성 신년사 및 94년 4월의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수출산업 육성을 강조하였다. 에너지 및 식량을 적시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외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구소련 및 동구권이 붕괴된 이후 북한은 과거의 전통적 교역방식으로는 도저히 외화를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신무역체제를 도입하는 등 무역확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국제시장 정세에 대한 무지, 과거 자력갱생에 기초한 산업생산으로 국제경쟁력이 없는 상품 등 국제시장에서의 활동의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한 측은 84년 합영법 도입이후 비록 일본 총련계 기업 및 한국기업이 주축이 되어 진행된 것이기는 하지만, 섬유류의 임가공 사업이 상당부분 북한경제 실정에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94년 북한의 수출에서 2위의 자리를 차지한 것이 바로 섬유류의 수출이었다. 이에 따라 임가공사업에 대한 중요성 및 효율성을 인지하고 기존 공장건물을 활용하고 노후 설비만을 대체하여 바로 수출로 연계할 수 있는 경공업 및 기계류 조립 중심의 수출산업에 대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일본기업들의 초엔고 현상에 대비한 해외투자의 개념과도 어느 정도 일치할 수 있는 부분이다.

③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서의 투자

북한은 현재 나진-선봉지역을 직할시로 개편하고 일종의 제2의 공화국이라는 개념하에 이 지역개발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지난 92년 10월 외국인투자법을 도입한 이후 25여개에 이르는 외국인 투자유치 관련법도 사실상 이 지역의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집중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외국기업의 관심은 북한의 열정과 는 다르게 냉담하기만 하다.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뿐아니라, 북한자체의 정치적 위험이 높고 투자대상지역으로서의 이점이 대외적으로는 중국 및 베트남에 비해, 대내적으로는 평양부근 및 신의주지역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지

역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서는 최초의 개방지역일 뿐 아니라 북한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자력갱생에 크게 위배되면서 까지 이 지역을 개방하는 정책전환을 한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자본의 유입시에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적으로는 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 질 것이다. 현재 이 지역의 통신은 팩시밀리가 한 대에 불과하며, 통신도 평양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에 대한 투자 또한 적극화 될 것이다. 현재 나진, 선봉, 용기항 등이 있으며, 청진항도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이다. 특히 일본기업들은 90년대 초반부터 북한측의 요청에 의해 이 지역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 실정이며, 일본 동북부 지역 기업 및 인력들을 중심으로 두만강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북·일간 수교가 이루어질 경우 북한에 제공 될 수 있는 자본의 형태는 크게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청구권이다. 전후보상금 혹은 전쟁배상금의 형태이다. 금액규모 및 지급형태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대북한 지원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과거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원금을 감안하면 약 50 달러 전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북한당국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금의 형태일 것이다.

둘째는 일본정부의 ODA차관이다. 일반적으로 일본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투자위험이 높은 지역의 투자에 대해 성급한 투자결정을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본정부의 자금지원하에서는 안정적인 투자활동을 전개할 수 있으므로 국교정상화와 함께 북한에 대한 ODA차관 지원이 결정되면 일본기업의 북한진출은 활발해 질 것이다. 일본의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향후 이루어질 정부사업에 있어서 최대의 이권사업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자금도 북한당국이 직접 운영할 수 있겠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일본의 개입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다.

셋째는 조총련계 재일교포들의 재산귀속문제이다. 수교와 함께 이들의 국적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확정될 것이며, 이에 따른 재산귀속문제가 따르게 될 것이다. 현재 조총련계 교포들이 일본내 자산은 약 2조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금액이 전액 북한으로 귀속되지 않겠지만 공식적으로 북한에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을 의미한다.

(동용승, 「북·일 수교과정 및 수교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다. 남북경제교류에 미칠 영향

북한과 일본의 수교는 이제 시기상의 문제가 남았을 뿐, 수교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양국간의 수교가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남북관계에서 범위를 축소하여 현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경제교류 측면에서 미칠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긍정적인 측면

북한과 일본의 수교에 따라 남북경제교류에 미칠 긍정적인 영향은 직접적인 면보다는 북한경제의 변화에 따른 간접적인 효과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의 개방을 촉진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얼마 남지 않은 지구상의 사회주의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폐쇄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북한체제가 개방을 지연하고 있는 이유는 체제유지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신감의 결여는 두가지 면에서 기인한다. 우선 북한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제난이다. 자력갱생을 통한 자립적 민족경제건설이라는 목표하에 수십년 동안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우선정책의 추진 결과는 현재와 같은 심각한 산업간 불균형과 함께 개방화되고 있는 국제사

회에 적용하기 힘든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주적인 남한이 이 기간동안 상당한 경제적 성과를 거두면서 북한체제에 가장 위협적인 존재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므로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개방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의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과의 수교는 상기의 두가지 요소를 동시에 제거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일본으로부터의 유입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북한이 택할 수 있는 길은 개방을 통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는 길일 것이다.

둘째는 보다 장기적으로 북한경제의 회생을 통해 향후에 예견되는 남북통일시에 체제전환을 위한 통일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의 자금은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경제 회생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 수출산업의 육성, 개방지대의 확대 등 북한경제의 힘을 원천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남북한간 통합시 체제간 격차에 따른 비용부분을 북한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축적될 것이다.

셋째는 단기적인 효과로서 북한과의 경제교류 확대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서도 살펴보았듯이 남북경제교류는 북한이 교역할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해 있지만, 투자문제는 남북관계와 연계되어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자본의 유입을 통해 북한경제의 수출역량이 향상된다면 우리와 교역은 현재보다 훨씬 확대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자신감에 기초하여 한국과의 전략적 제휴도 전혀 불가능한 예상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질서를 차츰 이해하게 되면서 한국보다 더 좋은 경제 파트너는 없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② 부정적인 측면

북한과 일본의 수교가 남북경제교류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은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북한시장에서의 한-일기업간의 경합이다. 무역분야를 비롯하여 섬유·전자 및 기계부품 등에 대한 임가공 사업,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사업, 북한의 대륙붕 개발, 백두산·금강산 등을 개발하는 관광개발사업, 어업 등의 분야에서 경합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일본기업의 입장에서는 100엔 대 이하로 진행되고 있는 엔고에 대비하여 새로운 투자대상지역을 찾아야 할 입장이며, 새로이 열리는 북한시장은 지리적 인접성 및 일본정부 자금의 진입이라는 비교적 양호한 투자환경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투자진출에의 적극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일본기업의 대북한 투자를 통해 생산된 제품과 일본시장에서 경쟁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일본기업의 동남아 및 중국산 기업과 경합하는 문제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무역을 비롯하여 1차 상품, 노동집약적 상품 등에서도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셋째는 북한당국이 한국기업을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기업의 대북한진출은 어떠한 형태로든 남북간의 정치적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는 구도이지만, 일본 기업의 경우는 북한당국이 자금을 보유한 상태에서 발주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므로 경제논리가 우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으로서는 경제개발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투자가 지연되는 것을 기다릴 만큼 여유가 많은 것은 아니다. 반면 일본기업의 진출과 함께 미국의 다국적 기업 및 유럽각국의 진출도 예상되므로 한국기업에 대한 배제의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동용승, 「북·일 수교과정 및 수교가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4. 우리의 대응방향

가. 한국의 고려사항

① 「사전협의」를 위한 외교적 협조체제의 구축

- 일본과 북한간의 수교교섭에 관련된 모든 진전 상황은 한국정부와의 긴밀한 사전협의(Prior Consultation)하에 추진되어야 함. 일·북한간의 수교교섭 결과만을 한국정부에 사후 통고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으며, 한국정부와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한국의 국가이익이 손상되거나 저해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국의 목소리가 일·북간의 교섭과정에 직·간접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외교협조체제를 구축해야 할 것임.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임.
- 핵문제의 타결을 둘러싼 미·북한 교섭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국교정상화를 위한 일·북한간의 중요한 교섭과정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미국과의 외교협조를 통한 접근방식도 모색함으로써 한국정부의 소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야 할 것임.

② 한반도 평화정착 구축의 계기로 활용

- 북한은 일본으로부터의 배상금을 통한 경제협력에 의하여 국내의 정치·경제·사회를 안정시키고 남북한 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을 이용하여 4강과의 균형적 외교관계를 추진하고자 하는 바, 그 결과가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임.
- 일·북 수교교섭에 대한 한국의 기본입장은 교차승인의 원칙에 입각하여 일본의 대북수교를 받아들여, 남북관계의 진전(미·북합

의 실천, 남북대화 등)과 일·북한 교섭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조율시켜 일·북수교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구축의 계기로 연결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임.

- 교차승인의 원칙에 입각하여 판단할 경우 한국은 이미 러시아·중국과 수교를 한 고로 한국정부가 이를 반대해야 할 이유가 없음. 그러므로 일·북한 수교교섭 과정에 한국정부가 사전협의 원칙을 견지하되 가능하면 일본이 대북협상을 북·미 핵합의 실현과 남북 대화를 도와주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일·북한간의 수교가 이루어졌을 경우, 일본의 대북한 경제협력이 북한의 개방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함으로써 북한이 종전보다는 남북 경제협력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할 가능성은 있으나 좀더 여유를 갖는 태도로 남북대화에 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안착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이를 유도해야 할 것임.
- 일·북한 수교 이후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정착화시키는 문제가 보다 구체적으로 등장할 것인 바, 예컨대 「2+4」와 같은 동북아 안보체제의 구축이 일본의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도 준비하는 한편 이와 관련된 일본의 견해도 타진할 필요가 있음.

③ 일본의 대한반도 영향력 확대 견제

- 일본과 북한간의 수교가 이루어졌을 경우, 일본은 남북한 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면서 일본의 한반도에 대한 정치적·외교적 영향력을 가일층 강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한 바, 통일문제를 포함하여 수교 이후 일본의 한반도 정책에 관한 전략적 대응을 조속히 강구해야 함.
- 또한 일·북한 수교교섭에 대한 한국의 기본 입장은 남·북한 관계

의 진전에 상응하는 일·북한간의 수교교섭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며 양국간의 수교교섭을 예의주시하되 실질적인 교섭내용에 대하여는 과잉반응을 가급적 억제하고 일본의 남·북한 카드 사용에 의한 영향력 증대를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대처해야 할 것임.

- 또한 일·북 수교가 현실화되었을 경우, 일본은 북한에 대한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새로운 동북아 경제공동권을 구상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바, 이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인 고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도 필요할 것임.

④ 경제적 실리의 모색 필요

- 일본 기업체의 과도한 북한시장 독점은 한국의 북한진출 반경을 제약할 가능성이 농후한 바, 남·북한 경제교류 문제는 국내 경제관계라는 이점을 활용, 오히려 북한경제가 한국경제에 의존하도록 전략적으로 이를 유도함과 동시에 북한경제의 과도한 대일의존을 자제시킬 필요가 있음.
- 북한이 요구하는 일본정부의 배상에 대하여는 그 액수에 관계없이 북한의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인 바, 그것이 김정일 체제의 유지를 위한 정치적 목적과 아울러 군비확장을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 한, 한국의 국가이익에 상치된다고 보아서는 안되며 장기적으로 북한의 개방과 경제안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일본과 북한간의 수교교섭에 앞서서 남북한간의 대화통로를 구축하여 한국이 일본과 북한간의 수교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듯한 인상을 북한에 줌으로써 한국은 그 과정에서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적 접근을 함과 동시에 일·북관계의 진전에 한국이 지나치게 뒤쳐지지 않는 인상을 줄 필요가 있음.

(외교안보연구원, 「북·일 수교교섭 전망과 한국의 대응」)

북일협상의 타결이 한일기본조약과의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직면하고 있다. 북한이 65년도의 한국보다 더 유리한 조건에서 일본과 국교정상화를 모색할 때 한국이 이를 반대하는냐 아니면 협력하느냐는 남북관계와 한일관계의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하는가와 관련된 선택의 문제이다. 이 선택은 단지 민족적 입장이라는 가치판단적인 문제만은 아니다. 바로 이 선택은 북일수교 후의 동북아질서 재편과도 관련되며 통일 한국의 미래와도 관련되는 현실정치의 전략문제인 것이다. 북일수교(북미수교)는 한반도에 대한 주변4강의 교차승인을 의미하며 역내안정에 기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북일수교에 의한 교차승인은 미국에 대한 한반도의 비중을 줄여줄 것이고 미국의 개입을 축소시키고 중국과 일본의 각축을 유발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또한 4강에 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군축에 대한 압력도 강화될 것이다. 한일관계의 차원에서 국한해서 말한다면 북일수교는 일본의 대한반도 등거리 외교의 공식화를 의미하며 이는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발언력을 높여주고 남북한간의 경쟁, 대립관계가 이용당하는 상황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있다. 즉, 남북한의 상호의존관계 형성에 장애물로 기능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북일수교협상을 한국은 단지 북한 핵문제와 한·미·일 공조체제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만은 없는 입장이다. 한국은 한일관계를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북일협상에서 과거사 문제나 보상과 관련하여 남북한 공조체제를 형성하여 일본을 견제하고 북한의 주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이는 남북한 협력체제 형성의 주요한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북일관계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증대시켜 일본의 남북한 등거리 외교에 대한 제동수단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북일협상에서 사안별 남북한 공조는 북한과 일본에 대한 한국의 영향력을 동시에 증대시켜 줄 것이다.

(양기웅,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

나. 북·일수교의 활용방안

북한과 일본간의 수교는 제차 강조한다면 기정 사실이며, 시기만 남았다는 점이다. 또한 미국과 일본과의 수교가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는 불른 기업의 시가이 교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은 도와주는 대상이 아니고 투자 및 교역 즉 경제교류의 대상이라는 인식, 즉 탈냉전적 사고가 시급히 요청된다. 또 하나는 미국 및 일본기업들의 진출을 견제하기 보다는 보다 장기적이고 큰 시각에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좋은 수단이며, 이는 남북한 경제교류를 오히려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자세로 적극적인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부 및 기업의 대응 및 활용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① 정부차원의 활용방안

수교이전까지의 대응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현재가 한국기업들이 북한에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기이므로 한국기업들의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근거는 지난 7년여 동안 추진한 남북교역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북한의 연간 교역은 2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규모이다. 남북교역은 약 2억 3천만달러(94년 승인실적)를 기록하여 북한 전체교역의 11%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2배 이상의 규모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북한상품의 남한내 반입은 관세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기업들은 비교적 충실하게 정부에 신고하고 있다. 그러나 반출의 경우는 관세 혜택이 없을 뿐아니라, 실질적으로 한국산 제품이 북측에 진입하기는 어려우므로 외국산 제품을 우리기업이 북한에 공급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또한 국외에서의 계약을 통해 북한으로 제품을 공급할 경우와 북한산 제품을 한국이외의 제3국으로 수출할 경우 신고에 따른 이점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측에서 추계하고 있는 남북교역 통계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최근 조총련계 무역회사들은 실질적으로 북한무역의 상당부분을 한국기

업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에게는 북한산 상품가운데 비교적 인정 받고 있는 금괴, 아연괴 등의 할당이 줄어들고 있다는 불만을 표시하면서도 한국기업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다. 이는 다시말해 우리 정부가 한국기업들이 어떠한 형태로든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맺는 것을 강력히 제재한다면 북한의 대외거래는 붕괴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사실을 정확히 인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아직도 한국기업과의 공식적인 경제교류는 부인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교포 및 제3국기업을 통한 간접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반면 무역부문에서 이러한 성과를 거둔 것은 우리 정부에서 무역부문에서 만큼은 정치적 문제와는 별개로 별다른 제약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이 대외무역 부문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섬유임가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대북한 임가공사업이 투자의 전단계라는 점이다. 이미 한국기업들이 섬유부문의 설비대체를 통한 임가공 사업에서도 상당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분야에 대한 투자도 동일하다. 오히려 일본과의 수교이후에는 한국기업들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현재가 한국기업이 북한의 별다른 제재없이도 진출할 수 있는 가장 적기인 것이다. 북한은 현재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성과는 미미한 상태이므로 투자유치 실무담당자들은 곤혹스런 입장에 처해 있다. 실제로 북한내에서 투자유치 담당자들은 일종의 개방론자라고도 할 수 있다. 이들의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것도 중요한 전략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현재 상태에서 다양한 분야에 무역과 같이 북한경제에 잠입할 수 있다면 향후 일본 및 미국과의 수교시에도 철저한 배제는 어려울 것이며, 대북한 협상력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를 허용하더라도 큰 소리로 떠벌리면서 허용하면 그 효과는 전혀 없을 것이다. 자연스런 투자진출을 통해 어느사이엔가 무역과 같이 북한경제의 전반적인 부분을 장악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통합을 위한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전략과 함께 일본과의 수교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측면을 감안

하여 수교를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표면적으로 적극 지원하기 보다는 북·일수교 문제에 대해 여타의 외교적 걸림돌을 만들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다른 측면, 즉 북한과는 관계 없는 한·일간 경제관계에서의 부수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우회전략이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되면 이는 대북전략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② 기업차원의 활용방안

현재 상황에서 우리 기업은 남북경제교류는 물론이고 남북관계 개선의 첨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교역 및 투자분야의 여건은 양호하지 못하다. 특히 우리기업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서방국 기업들의 경우는 북한 방문시 상대적으로 남한기업에 비해 제약이 덜하며, 투자지역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기업의 경우 직접적인 경제교류를 제한하고 중간 에이전트(주로 재외교포 기업가들)가 반드시 개입하는 상황이며, 투자지역도 나진-선봉에 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북한으로서는 남한기업의 진출에 특혜를 제공하여 북한에서 투자성공사례를 시급히 만들어야 할 형편이다. 하지만 이 문제도 남북간의 정치적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쉬운 것만은 아니다. 나진-선봉지역은 세제혜택 등이 여타 중국 및 베트남에 비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투자진출은 단순히 세제혜택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성이 있어야 한다. 아직 나진-선봉지역이 시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당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남북간에는 항상 특수상황이라는 것이 있다. 향후 남북한의 시장이 통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만으로도 시장개척차원에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장기투자계획을 세울만하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위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 북한시장 접근을 위한 제반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정보력도 필요하며, 정치적 현상에 의해 타격을 받더라도 기업자체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을 자금력도 요구된다. 한편 미국 및 일

본과의 관계진전이 이루어지면서 북한시장을 노리는 외국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기업들도 주로 초창기 북한시장개방을 목표로 다국적기업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는 북한시장이 남한기업의 전용물이 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미 국제경쟁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황에서 남한기업이 북한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방안은 남한기업간의 협력이다. 대기업간의 협력은 물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북한시장에 대한 경쟁자는 결코 우리기업이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교 이후에는 일본의 자본을 활용하여 진출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동남아 지역에 일본의 정부자금이 지원되었을 때 일본의 첨단기술을 적용하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는 한국기업에게 재하청을 주는 경우가 있었던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경우는 더욱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부터라도 일본의 주요 종합상사들과의 대북진출 연계방안 등을 공동 작업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사전정지작업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동용승, 「북·일 수교과정 및 수교가 북한경제에 미칠 영향분석」)

다. 역사청산 문제와 한국 관련성

북·일정부간 교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의제 중 구조약 무효시점의 처리 문제는 북·일간 현안이면서 동시에 한국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현안이다. 일본은 이 의제에 관해서 기본적으로 한일조약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선에서 타결을 짓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표명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의제는 한일회담에서도 양국의 첨예한 대립 속에서 난항과 갈등을 거듭했던 사안이었다. 결국 1965년의 한일조약에 의해 한일간에는 이 문제가 형식적으로 해결을 보았지만 이 의제와 관련한 조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양국은 전혀 상이한 입장을 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현재까지도 양국의 정치적, 감

정적 대립의 주된 근원으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식민지 지배의 합법성 문제는 북·일간의 가장 첨예한 대립을 겪고 있는 문제인 동시에 한일관계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의제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 북한측은 일제의 식민지 지배가 물리적인 강압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구조약에 근거하고 있는 만큼 구조약과 식민지 지배는 당연히 불법이며 원인부효라는 것을 일본측이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일본은 식민지 지배로 조선민족이 입은 피해와 손실에 대해서는 도의적이고 정치적으로 사죄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어디까지나 구조약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식민지 지배 자체는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입장을 강변하고 있다. 즉 일본은 구조약이 무효가 된 것은 한민족이 해방된 이후 또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은 이 의제와 관련하여 한일조약과의 정합성의 테두리 내에서 해결할 것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 문제는 한일관계에서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과거사청산 현안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구조약의 무효시점에 관한 북·일간의 대립은 한·일간의 대립의 연장선에 위치에 있는 문제인 것이다. 최근 한국정부는 한일조약 제2조에 관한 일본의 공식해석을 변경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즉, 외무부는 일본정부에게 한일합방조약이 당초부터 불법이며 원인부효라는 해석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구조약 무효시점 문제에 관한 한, 한국정부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대일정책은 북일교섭에서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한 남북한간의 전략적 공조는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일본과의 과거청산 문제는 남북한 개별정부의 외교적 과제이기 이전에 일본국가와 한민족 전체구성원 간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설 경우 한국은 일본정부의 한일조약과의 정합성 운운 주장에 대하여 단호하고도 철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한국은 차제에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관한 일본정부의 해석을 변경하도록 요

구함과 동시에 북일교섭에서도 일본이 구조약 원인무효를 수용하도록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과거사청산 문제에 관하여 취하고 있는 일본정부의 입장이 북일교섭의 타결수준을 한일조약의 타결수준으로 레벨다운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한 이상 한국으로서도 이에 대해 방관할 수 많은 없는 것이다.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은, 한·일조약과 북·일교섭이 정합성을 유지해야 한다면 구조약이 당초부터 원인무효라는 해석을 일본정부가 수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북·일교섭을 타결짓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일본정부가 이러한 한국의 주장을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매우 희박하다. 어차피 한일간의 과거사 청산은 일본의 역사인식 수준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할 과제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북·일교섭의 타결을 계기로 하여 구조약 무효시점에 관련한 분명하고도 단호한 입장표명을 명백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이 문제에 관하여 한국이 침묵하거나 방관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한국의 의도와는 별개로 기본조약의 제2조에 관한 일본정부의 공식해석에 한국이 묵시적으로 동의하는 것처럼 비추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원덕, 「북·일국교교섭과 일본의 대북정책」)

〈참 고 논 문 명〉

1. 이원덕(서울대 지역종합연구소 특별연구원), “북·일 국교교섭과 일본의 대북정책－한국의 대응책 모색을 위한 시론”, 『'9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VI)』, 통일원, 1995.
2. 동용승(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북·일 수교과정 및 수교가 북한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9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II)』, 통일원, 1995.
3. 양기웅(한림대 정외과 교수), “북·일 국교 정상화 교섭(1991~1995)－양면 협상이론(Two-Level Game Theory)적 관점에서 본 일본의 협상전략과 협상교착의 원인”, 『'95 북한 및 통일연구 논문집(VI)』, 통일원, 1995.
4. 김영춘(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일본의 한반도정책”, 부산외국어대 국제문제연구소 주최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5. 4. 25.
5. 임재호(경북대 교수), “북·일관계와 그 전망”, 영남대 통일문제연구소 주최 통일문제 국제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5. 9. 1.
6. 이우현(명지대 교수), “북·일 경제관계의 현황과 전망”, 『월간 통일경제』, 1995년 7월호
7. 谷浦孝雄(일본 新潟大 교수), “일본의 대북접촉 : 현황과 전망”, 강릉대 통일문제연구소 주최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1995. 11. 29.
8. 외교안보연구원, “북·일 수교교섭 전망과 한국의 대응”, 『주요국제문제 분석』, 1995. 1. 25.

주변국가와 한반도

인 쇄 1995년 12월 27일

발 행 1995년 12월 28일

발행처 통 일 원
남북회담사무국 (영인본)

인쇄처 웃 고 문 화 사
